

SAe.a.8

지식인 연대

민주압 진보를 위한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Progress

제 3 호 1996. 8.

탈냉전시대의 통일문제

151-0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0-41 4층 대표전화 : 879-0871 Fax : 874-2935 ID. 나무, 참세상 SD

민주압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는 이런 일을 합니다.

① 연대 활동

▶ 「민중운동탄압분쇄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노동자 민중운동과 함께 합니다.

① 소토론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 특정주제를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동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진보적 견해를 조직하여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포럼

▶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주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진보운동의 방향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① 회보 발간

▶ 기존의 소식지를 확대 개편하여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주압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제 3 호 1996. 8.

민주와 진보를 위한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Progress

제 3 호 1996. 8.

지식인
연대

발행인 / 김진균 // 발행일 / 1996. 8. 1. // 발행처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

151-05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930-41 4층 대표전화 : 879-0871 Fax : 874-2935 ID. 나우, 참세상 SDP96

머릿말

탈냉전의 시대에 사회주의권의 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는 이 시점에도 현 정권의 통일정책은 여전히 냉전의 그늘 아래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칼춤이 외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투쟁의 달 8월을 맞아 '통일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어 국내외적 여건이 변한 상황에서, 그간 유형에 의존하던 통일방법론 중심의 통일논의를 극복하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논리적 체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해구 선생님께서 써 주신 「한반도 통일문제: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현황」은 현 시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두 편의 원고는 언론 등에서 늘상 접하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기늴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김귀옥 선생님의 「다시 생각하는 '북한사회 바로알기」는 끊임없이 거론되는 북한체제 위기 또는 붕괴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침착하고 담담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북한의 사회구성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상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여기서 비롯된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간에 사전 논의없이 쓰여졌지만 북한 경제의 현실을 70년대의 세계에너지파동과 국제경제공황의 북한 내부 유입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의 내적 요인과 미국 등의 대북경제봉쇄정책과 대외교역의 경화결제 등의 원인에서 찾고, 그 해결 역시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미·일 등 서방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원고의 내적 일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통일정책 분석과 대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희옥 선생님의 「중국의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에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소상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영 선생님의 「독일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에서는 흡수통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자료이면서, 정권과 자본의 흡수통합정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일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초하 선생님의 「변혁과 통일에서 '민족'이 설 땅은 어디인가?」는 주례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글로서 '민족'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인 고용촉진은 어려울 것이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최현숙 선생님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말 어렵습니다」는 장애인복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의 측면에서 자본과 정권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선생님의 「콜라주의 감수성과 이미지마케팅 - '서태지아이들'의 스타일과 뮤직비디오 분석」은 서태지현상을 통하여 현재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는 교육현실과 이와 결합된 자본주의 상업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계층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부문에서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그리고 걸러서 전달하는 특성있는 편집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차례

머릿말

말 씀

특 집

“창조적 통일운동”을 다시 제안한다

// 양재혁 4

탈냉전시대의 통일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 정해구 6

다시 생각하는 “북한사회 바로알기” // 김귀옥 11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 이태섭 22

중국 통일 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 이희옥 28

독일 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 // 이해영 35

변혁과 통일에서 “민족”이 설 땅은 어디인가 // 유초하 52

소도론회

장애인 고용촉진 정말 어렵습니다 // 최현숙 65

콜라주의 감수성과 이미지 마케팅 // 김수진 72

- '서태지와 아이들'의 스타일과 뮤직비디오 분석

지식인연대 소식

“창조적 통일운동”을 다시 제안한다.

양재혁 (지식인 연대 부대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창조적 운동”이란 본래 현실의 모순을 가장 바람직하게 정리하여, 그 모순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실천하려는 소수 지성인의 노력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창조적 운동은 미래지향적 이상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생활 과정에서 그 목표를 보편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까지 수천 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한 언어와 혈통, 문화와 예술 등의 동질성을 반공이라는 양분법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분할하여 오직 대립과 투쟁이라는 냉전시대의 가치관으로 획일화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적대성을 반성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주체적 역량으로, 국제관계에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즉 냉전시대의 가치가 아닌 “통일시대의 민족의식”을 정립하여 지식인들이 앞서서 대중화시켜 나가야만 할 시기이다.

수천 년간 함께한 민족동질 회복에 관한 논의는 해방 후 미군정치하에서 철저히 탄압되었고, 이승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주체였던 일제경찰 잔재에 의하여 “반민특위”가 강압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친일세력은 정치·경제·행정·군경, 특히 학계·문화계에서 오늘날에도 애국자로 둔갑되어 민족통일문제를 방해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는 통일문제를 창구의 일원화라는 구실로 민주적 논의를 탄압하여, “민족주의 논의는 곧 반미주의이며, 반미주의는 곧 용공주의”라는 도식으로 왜곡시킨 것이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의 실상이다. 2차세계전쟁 후 미·소에 의한 우리의 단일민족 분단정책 체제에서는 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통일논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의

세를 배격하고 자주·평화적 통일 논의를 추구하던 지식인들이 수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식인 스스로 민족통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상식으로 정착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연결되는 분단 고착 독재체제에 영합하여 그들의 친일 행위를 반공 논리로 은폐한 지식인들은 동족을 오직 공산당이라는 이념으로만 재단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보아 분단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였다. 그 결과 민족노선과 민중을 탄압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악역을 그들은 자행하였다.

그러나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소수의 지식인들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탄압이 심할 때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억압으로부터 굳건하게 대항하여 주체성·자주성을 확보하려는 활동을 확대하였다. 몇 해 전만 해도(아니 오늘날도 재수 없으면) 허가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실형을 면할 수 없었으나, 역사적 상황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전환기에 있다.

민중의 의식은 동족간에 협력하는 공영의 시대로, 그리고 확대된 교류와 협조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 신뢰 속에, 북조선이 미국·일본과 수교를 맺고 정상적 외교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통일의 여건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해서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상호간의 공격적 무기와 군사력을 감축하며, 또한 주한 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 내지 철수 할 때 평화통일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우리 「지식인 연대」의 임무는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각 방면에서 일반화·대중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지식인들은 각개 전문분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지난 50년간 반공 교과서를 통해서 잘못 각인된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지식인들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민족통일 운동”이 절실한 순간이다.

한반도 통일문제 ;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정 해 구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 근대 역사와 통일의 역사성

남북한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무어라 꼭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우리의 정서상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통일에 대해 이같은 질문은 다소 엉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통일문제가 구체적인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통일은 당연한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에는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단된 과거 역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분단 이후 남북한 사회구성의 이질화를 들어 보 다 계급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또한 개개인이거나 특정 집단 또는 계층·계급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에 대해 이같이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통일의 필연성은 각 입장이 내세우는 단편적인

근거보다는 현재 우리 삶의 총체적 바탕을 형성해왔던 우리의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홉스봄(Hobsbawm)의 언급처럼, 우리에게 이미 근대 이전부터 혈연, 언어, 문화 등의 동질성에 바탕하여 오랫동안 정치공동체를 발전시켜왔던 전통, 즉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를 유지해왔던 전통이 있다는 점이다.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이미 근대 이전에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역사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대 이후 오히려 본격적인 민족국가 형성을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근대 역사의 출발과 더불어 외세의 침탈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형성의 또 한번의 기회라 할 수 있었던 1945년 일제 패망 직후에도 한반도에 진입한 미소의 영향 아래 남북한에 분단국가가 들어

섬으로써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남북한 분단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강력한 민족적 동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 근 1세기 이상에 걸쳐 근대적인 민족국가 형성이 가로막혔던 역사적 경험, 아마도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일에 대한 요구는 근대 이전부터 민족적 동질성을 지녀왔던 우리 민족이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기는 커녕, 타의에 의해 그 민족적 동질성마저 파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통일문제의 중층적 성격

이같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는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의 국제역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층적인 성격을 지닌다. 근대적인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라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본다면, 통일 문제는 어쩌면 국내적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의 국제역학에 의해 더 좌우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일문제에 대한 분석은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및 국제적 차원 등의 중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적 차원의 분석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계급 계층적, 민족적 차원에서 어떤 세력이 통일세력 또는 반통일 세력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각 세력의 이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경험

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지배층은 통일에 대한 주도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일제 식민지배 및 남북분단 과정에서 외세와 결탁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우리사회의 지배층은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대가로 그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었기에 통일문제를 주도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서구 부르주아지들이 가졌던 그러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오히려 민족국가 형성을 요구하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정당성은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일반 민중들, 또는 그 대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통일을 주도할 역사적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통일과 관련된 국내 차원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그 이상으로 통일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의 국제역학 관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속에서 결정되었던 과거 역사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통일역량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통일역량이 분산되어 있거나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남북 분단의 배경이 되었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한편, 이에 따라 남북관계

의 진전이 모색되고 있는 사실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 이 글은 이하에서 탈냉전 상황에서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려 한다.

탈냉전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탈냉전 상황을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정세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한반도 정세는 소련을 위시한 북방 사회주의진영과 미국을 위시한 남방 자본주의진영 사이의 대립과, 그 대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남북한의 대립이 그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고 북한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한반도 주변정세는 탈냉전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선 그 일차적인 변화는 사회주의권과 남한 사이에 존재했던 냉전 장벽의 제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980년 말-19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할 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남한은 동구 및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수교를 맺음으로써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했던 남한과 사회주의권 사이의 냉전 장벽을 제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로 인해 일정 정도의 시차는 있었지만 북한과 미·일 등 자본주의진영 사이의 냉전 장벽도 현재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다. 즉 북·미간 북핵문제가 1994년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면서 북·미 관계개선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일 수교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과거 냉전시대에 한반도를 둘러싼

던 냉전적 대립 구도는 현재 상당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냉전적 대립의 구조가 이같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냉전하 동아시아의 신질서 또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동아시아 냉전적 대립이 소·중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 구도였다면, 탈냉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소련의 영향력이 위축됨으로써 야기된 힘의 공백은 미·일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 대한 미·일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개입'(engagement) 및 '확대'(enlargement) 전략에 바탕하여 미·일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에 발표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일이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반면 미·일의 이같은 영향력 확대에 대항할 새로운 잠재적 강대국으로 주목되고 있는 중국은 지난 70년대 말 개혁개방노선을 시작한 이래 최근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21세기 이 지역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취했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전략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봉쇄'(containment) 전략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저지하는 '억지'(deterrence) 전략이라 할 수 있었다. 이같은 기본 전략 속에서 미국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남한과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북한 사이의 분단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했다. 그 결과 취해졌던 정책이 '2개의 한국' 정책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따라서 소련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 즈음하여 미국은 '봉쇄'와 '억지'로 표현되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환, '개입' 전략을 새로이 채택했다. 즉 소련 영향력 약화로 힘의 공백 상태가 야기된 한반도에 적극 개입하여 한반도문제를 미국의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끌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개입'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경제난 등 위기상태에 빠진 북한체제를 지원,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추진케 함으로써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겠다는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대한반도 정책 변화, 특히 '개입' 전략에 의한 '연착륙' 정책으로의 대북정책 전환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탈냉전 이후 북미관계는 북핵문제로 인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결과 양측은 무력충돌 일보직전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는 북핵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개선까지 약속함으로써 양측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요컨대, 미·일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동아시아 신질서가 태동하는 가운데, '봉쇄'와 '억지'의 냉전 전략을 넘어 '개입'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이제 탈냉전 상황에서의 북미관계가 적대관계로 시종했던 냉전시대의 그러한 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

탈냉전 상황을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탈냉전 상황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남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를 진전 시킴으로써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었고, 그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었더라면 그것은 과거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등장한 이후 남북은 대화를 중단한 채 상대방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일관했다. 물론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이후 북미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남한측의 대북 강경정책이다. 남한측은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들어 대북 강경정책의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및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조문파동'으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지난 1995년에 15만톤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남북대화 재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이같은 남한당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및 변화의 여파와 내부적인 경제난

다시 생각하는 『북한사회 바로알기』

김 귀 옥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들어가 는 말

북한을 위기설로 설명해 온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1948년 9월 9일 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줄곧 있어 온 말 중 하나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이 급변할 때면 북한의 위기설, 군대쿠테타설, 폭동설, 김일성사망설, 민족배신설) 등이 우리에게 전파되곤 했었다. 그러나 1995년 여름 홍수 이래로 북한에 관한 사정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국제적인 소식통들에 의해 식량 위기설과 함께 비판적으로 들려 오고 있다. 1996년 4월 '신음하는 북한'을 방문하여 기행문을 발표한 바 있는 <한겨레 21>의

1) 1996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 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비라고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다"고 북한의 백년만의 큰물 난리를 엄살이거나 배신으로 단정지었다.

통신원 이충렬은 '황해도 어느 한 산기슭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식량 부족으로 아예 휴교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가 만난 한 '무역 일꾼'은 솔직하게 현재 그들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푼푼 말린 나라는 없을 것이다. ...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못 견디는데 우리는 그래도..."²⁾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줄곧 접하면서 우리는 북한에서 전해져 올 위기나 붕괴를 한편으로는 염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초조하게 기다려 왔다.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었다. 적지 않은 발표문들이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D-데이로 삼았고, 포스트 김 상황에서 북한의 각종 쿠데타 및

2)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30일자, 5면.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려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그 결과, 북한측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남한 배제정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미관계가 상당 정도 진전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스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간의 현안으로 등장한 대북 식량지원 및 4자회담문제는 그 성사여부에 따라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만성적인 식량난과 지난해 대홍수로 인해 극도의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는 꼬이기만 해왔다. 그것은 남한측이 대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 재개 등 여러 조건을 내세웠고, 이에 북한은 극도의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식량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자존심 대결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4자회담 또한 이를 북한이 수용한다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줄곧 주장해왔던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및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들 현안들의 성사를 통해

대북 '연 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한측은 대북 식량지원을 4자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여전히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남한 측의 이러한 선택에는 대북 식량지원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들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남북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남북관계의 전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 영향력 강화와 남북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 자신들의 주도권 회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상호 신뢰 아래 남북의 주요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한이 북한 붕괴를 바라면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거나, 북한이 이를 우려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으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할 때,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미국에 손에 좌우되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가 과거의 냉전 및 분단체제를 와해시키고 있고, 미국의 대한 정책 역시 크게 변하고 있는 이때, 남북한 당국은 상호 협조에 의해 스스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한 민중들에 의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압력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붕괴를 둘러싸고 연구비를 소모했다. 마침내 1994년 7월 6일 김일성주석은 자연사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란스러워진 곳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다. 조문파동으로 불거진 주사파 파동은 이후 남북 관계에 회복되기 힘든 골만 남겼을 뿐 북한은 그 많은 시나리오들이 예견했던 바와는 달리 붕괴되지 않고 있다.

1995년 홍수피해가 있자 북한의 붕괴는 다시 날을 받아 놓은 것처럼 1996년 봄까지 붕괴설은 설왕설래했다. 게다가 4월에 정전협정 무효선언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부분적인 무력시위를 하게 되자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한바탕 전쟁으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하는 예상으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이충렬씨의 고통찬 기행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수마가 활기고 간 북한은 굶주림과 영양실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혼란은 없다는 점이 있었다. 물론 경제 난국이 계속 진행되고 국외로부터 일정한 원조나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 3자의 관점에서 보건, 북한 관리나 주민들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그들은 이 고난을 '오늘은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동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망하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논자들이 밝히듯 북한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강제적 동원 체제, 병영 사회주의국가, 스탈린식 전체주의국가로서 파악한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해 나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한 물음을 정권의 차원에서 대답을 찾기보다는 북한의 대중과 그들의 사회정치생활의 차원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

이 북한을 중심권력과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려 해왔다. 북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대중운동과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드러나 있는 북한 권력의 표상만을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충렬의 기행문에서 보듯이 '그래도 우리나라 버틴다'는 자긍심 같은 것을 가진 북한인민의 태도에는 바로 북한에 대한 주인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 대중들이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북한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력갱생·간고분투'하면서까지 북한사회를 지키고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 힘을 북한이 50여년간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북한식' 민주주의와 사회참여의 원리들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권의 논리가 아닌 북한 대중적 시각에서 그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 구성 원리, 그 원천을 살펴보겠다. 북한식 대중운동의 원천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제 1의 원천은 북한식 민주주의의 한 틀인 사회구성원리로서 '혁명적 군중노선'이다.

다음으로 제 2의 원천은 '혁명적 군중운동'이다. 이는 군중노선이 제도화를 통해서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는 보완장치이자, 관료주의를 억제하여 북한 대중이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 제 3의 원천으로는 자력갱생의 지역단위로서의 군지역거점전략을 들 수 있다.

이제 북한 대중들이 나름대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이 그간 어떤 형태로 작동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식 민주주의, 대안의 사업체제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면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은 화를 내거나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보통 자유주의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정치적 영역에서 국한시켜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³⁾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말했던 레닌의 말이 구태의연하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자유주의 정치학에서 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견해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한 사회의 주권을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수행하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라면 그 원리가 정치영역 어느 기관에 국한될 리가 없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대중은 주권을 장악하고 국가 행정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여 운영하였을 때 민주주의는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의 측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표현 중 하나는 연례 행사처럼 던지는 투표권(주로 선거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생산의 구상과 실행권을 장악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생산의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켜 구상을 독점하여 대중을 기계 부속품으로 만들므로써 생존권의 한 측면을 박탈했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⁴⁾였다면 이를 회복하여 대중 자신이 구상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원리가 바로 맑스의 민주주의 원리의 하나였다.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은 그런 점에서 북한식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중의 사회

3) 노르베르트 보비오(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1993, 75쪽.

정치생활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현지에 더욱 접근하여 광범한 근로대중과 국가사업을 직접 토의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옹계 동원하여 그들의 요구를 체대에 해결하여 주는 군중적인 사업작풍"이라고 한다.

북한은 일제 항일무장투쟁시기때부터 혁명적 군중노선을 의거하였다고 하지만 사회구성원리로서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여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던 시기에야 가능했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산업 기관 및 국가기관, 근로기관에 적용된 형태가 '대안의 사업체제'이고 농촌에 적용된 형태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이다. 대표적으로 '대안의 사업체제'에 어떻게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는가를 살펴보자.

대안의 사업체제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 전기공장⁵⁾을 '현지지도'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통해 생산대중의 '창의성'을 동원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과

4) H. Braverman,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13-119쪽

5) 대안전기공장은 현재 남포 직할시 소속 대안 구역에 있는 특급기업소로서 종업원 수는 5,500명에 상당하고 10만KW(킬로볼트)변압기, 5만KW(킬로 와트)급 발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통일원 편, 『북한의 산업정책 및 시설현황』, 1984, 179쪽)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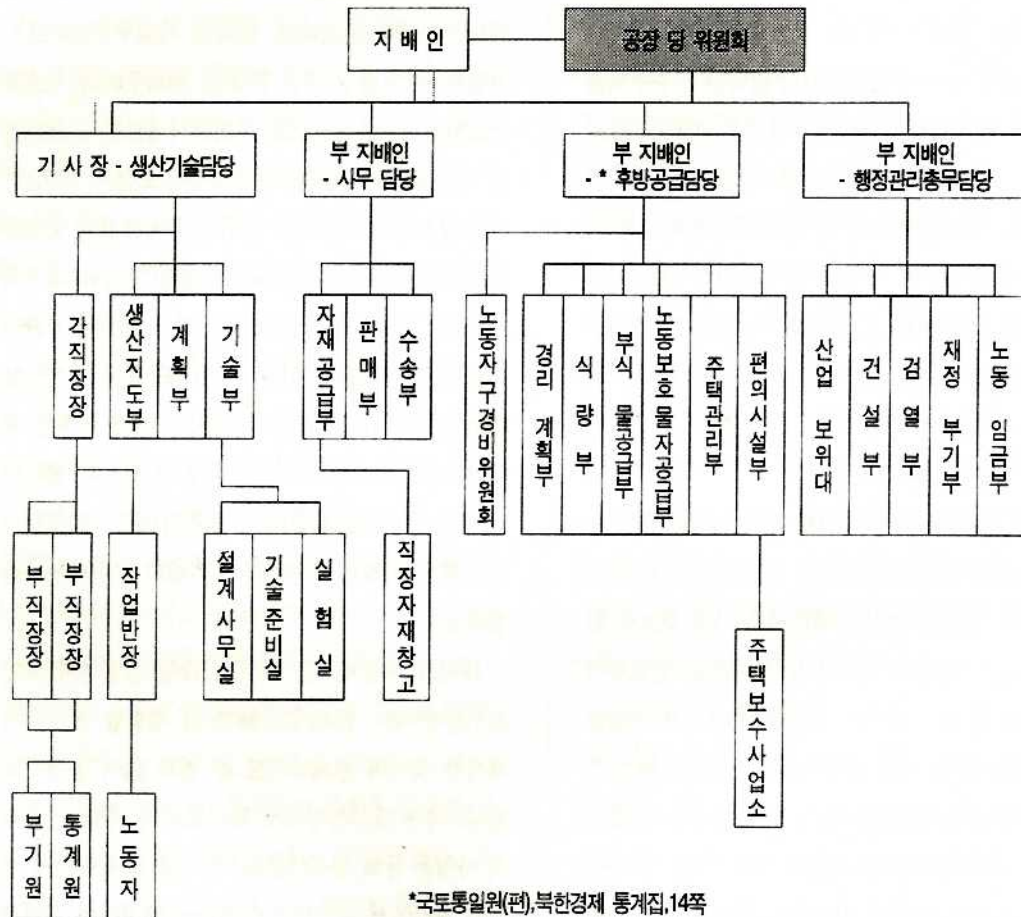
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장당위원회로 표현되는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집체적 지도체계**,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인**

인 후방공급체계(후방공급담당)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그림 1>과 같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노동자 및 근로자들을 생산과 관리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우선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일정한 부분에 대한 관리

대안의 사업체계 <그림 1>



*국토통일원(편), 북한경제 통계집, 14쪽

지도체계,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통일적

6) 북한은 현재 한 기업소가 자재를 공급하려고 할 때, 자신의 책임 하에 '중간환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업과 직접 계약 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심지어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연합기업소의 경우에는 자체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해서 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주기도 한다. 윤여령, "북한의 공업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76쪽
7) '후방공급체계'란 후방공급사업을 제도화시킨 체계이다. '후방'이란 "어떤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보장해 주는 일이나 지역 같은 것"을 의미하며 후방공급사업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후방사업과 공급사업"(『현대 조선말 사전』 하권, 2370쪽)을 뜻한다.

책임자로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작업반장 이외의 모든 성원들이 생산담당, 출근점검담당, 임금책정담당, 공구담당, 절약담당, 생산문화담당, 안전검사담당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이리하여 전 노동자 및 근로자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인 기업관리에 생산자 대중이 직접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중토의를 조직화한 방식을 들 수 있다. 군중 토의는 당위원회의 주도하에 매달 각 직장별로 조직되는 직장종업원회의와 협의회 토론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당, 행정, 근로단체의 책임일군과 기사장과 생산과, 자재과 등의 일군 전체가 참가한다. 일례를 들면 대안중기계연합소에서는 당일군이 생산자 대중과 같이 일하면서 지속적인 토론을 거친 결과 최근 몇해 동안 생산에 반영된 기술혁신안 578건 중에 노동자가 직접 창안한 것이 397건이라고 노동신문은 신고 있다.

공장당위원회는 매달 15일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달 생산계획의 실행에 대하여 토론한다. 또한 군중토론이 있기 전에는 개별담화나 직장신문, 공장내 방송 등의 수단을 통해 준비사업을 진행하여 경제계획의 의의와 전국적인 경제발전 전망, 다른 공장작업반의 경험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한다.

또한 각 공장의 노동자 및 근로자 군중토의를 통해 기간 계획을 세부화한다.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획'이란 생명과 같은 일이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국가사회주의사회는 생산과 분배, 유통 등에 철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이 당이나 중앙국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일이다. 생산량과 질을 정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이므로 이들의 계획참여란 필수적인데, 그 길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군중토의에서 열려 있다. 그 군

중토의의 주요한 내용은 총생산액, 상품생산액, 원가저하계획, 노동생산 능력 제고계획, 이윤에 따른 분배계획, 기술경제적 문제에 대한 토론 등이다.

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를 당이 중앙집중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으나 당위원회의 집체적 의사결정을 당의 결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당위원회의 구성에서 물론 당 대표가 참석하지만 당대표 외에도 작업장의 관리인, 기술자, 근로자대표 등이 참석하여 공동결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당이 결정하는 의사결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은 북한식 민주주의의 중요한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과연 어느 정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계획과 집행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이다. 또한 경제가 곤란에 처해 있는 오늘의 북한 현실에서 이러한 작동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도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대중,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이 자신의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만한 근거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

3. 대중적 열성과 창의성을 일상화시킨 '혁명적 군중운동'

이러한 군중노선은 대중의 열의와 창의성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대중적 열의와 창의성을 일상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군중운동이다.

현대 북한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 북한은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고 대답한다. 북한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의 영웅이 되기

8) 연합통신사 역음, 『북한50년』, 연합통신사, 1995, 120쪽

를 꿈꾸며 산다. 북한의 영웅은 비범한 걸출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조국과 대중,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운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다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계기가 바로 군중(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은 1956년 시작한 '천리마운동'을 비롯하여 각종 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군중운동을 몇 가지 짚어 보자.⁹⁾

1)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운동

군중운동은 주로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인들간의 경쟁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대중노력경쟁운동으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1979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계기가 된 일은 신비품종을 개발한 백설희(과학원 연구사) 등 과학자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주고 이들 과학자들을 대표적 모범영웅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역경 속에서 진행한 연구태도와 그 성과를 모든 대중이 본받도록 한 데 있다. 처음에는 '기술혁신운동'으로 전개하다가, 1982년 4월부터 <<80년대 김혁·차광수가 되자>>는 운동을 벌일 무렵 사상개조운동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1986년 <<숨은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근로자결기집회>>를 개최하여 '숨은 공로자' 5명을 초치하여 '영웅' 칭호 및 훈장을 수여하였다. 당시 1980년초 이후 6년간 평안남도의 노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 중 약 1천여명의 '숨은 공로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전국영웅대회' 및 '전투영웅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벌이고 있던 '2백일전투' 운동과 함께 건설부문뿐만 아니라 군사부문에서도 영웅을 발굴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갔

9) 이 군중운동은 주로 '로동신문'을 보고 정리하였다.

다. 김진계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건설사업에 참여한 모든 북한사람들이 영웅적으로 살려 했고 영웅칭호를 받고 싶어했다¹⁰⁾고 회상했다.

이러한 영웅만들기 운동이 일상화될 때 두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가지는 북한주민들이 이를 철저히 사회화시킬 경우 남한의 슈퍼맨 콤플렉스와 비견될 영웅콤플렉스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제도화의 필연적인 병폐 중 하나의 형식화·요식화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원하는 참된 영웅이라기 보다는 영웅이 될 경우 받게될 물질적·사회적 보상이 유인제가 되어 운동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의연히 더욱 철저한 군중운동과 사상개조사업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 3대 혁명소조운동

이 운동은 1973년 2월 12일 당중앙위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주석이 발의하여 시작한 전통적인 군중운동의 하나이다. 또한 김정일비서는 이 운동을 통하여 당내 권력의 기반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의 필요성은 중국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취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운동에는 당고위간부와 대중이 손을 잡고 실무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간관료·전문가를 공격함으로써 과거 자본주의적이거나 봉건적인 의식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숙청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¹¹⁾. 북한에서도 당시 현장 실무자는 과거 일제식민시대나 1940년대 교육을 받아 일정 정도 낡은 사상이나 사업태도를 갖고 있거나 소련파

10) 김진계, 『조국-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상, 현정문화사, 1990, 261쪽

11)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h.2

나 연안파와 같이 사대주의근성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가 되면 1958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사회주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온다. 북한은 전자의 사람들을 중국의 문혁과 같은 방식으로 숙청하지 않고 후자 청년들의 설득과 비판을 통해 포섭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이 바로 3대혁명소조운동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이자 열성당원인 대학졸업반 학생들과 대학을 갓 졸업한 기술자들, 그리고 일부 여대생들을 주축으로 3대 소조를 조직해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각 기관과 학교들로 파견했다. 1984년 9월 <<3대혁명소조원대회>>와 88년 2월의 <<3대혁명소조결성 15주년 중앙보고회>>에서 황장엽이 한 보고에 따르면 3대혁명소조는 공장·협동농장·각 기관과 학교 등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30-40명 규모로 파견,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1973년부터 11년 반동안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은 연인원 총 10만 8천 7백여 명이며 1984년 9월 당시 파견 인원 4만 6천 6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3대소조원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다음의 단편소설을 통해 보기로 하자.

"직장장 동지,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계획을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왜 수령님께서 가장 안타까와 하시는 나라살림살이문제는 이날까지 미루어 오고 또 미루자고 해요. 그렇게 미루어 나온 것만 해도 최악인데... 직장장 동지 량심이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도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희(3대혁명소조원의 목소리는 오들 찼다.¹²⁾

위 인용문은 소설이어서 현실 그 자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 소설을 통해 3대혁명소조운동의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 취지 중 하나는 바

12) 성혜량, 『혁명전위』, 『시대의 전위들(문학작품집)』, 평양문예출판사, 1983, 145쪽

로 관료주의·형식주의를 척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무조건 계획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중견간부에 대해 대학생청년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수령님'을 기준으로 삼아 비판하는 데는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는 고위간부라 할지라도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전문인테리층을 전제하여 북한식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운동 중 하나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다. 이는 1975년 당 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고, 12월 1일 함북 검덕광산노동자들의 모임이 그 시발이다. 위의 운동과는 달리 직장이 운동의 단위로서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등 3대혁명을 수행하게 된다. 1976년 이 운동은 '충성의 등록장제'를 실시하고 1977년 9월 '3대혁명붉은기 및 명예회장' 제도를 제정하여 직장간 집단 경쟁을 고취시킨다.

그 외도 <<80년대 속도>>창조운동¹³⁾,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¹⁴⁾,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 기대창조운동>>¹⁵⁾, <<1985년 6월 공장

13) 김주석 탄생 70돐 맞이 기념 사업을 위해 각종의 창조물을 건설하는데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군중적 생산혁신운동으로 1982년 직업총동맹 제6기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 혁신 운동을 통해 주체사상탑, 개선문 건립, 김일성 경기장,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평양산원과 병상관 등이 건설되었다.

14) 1961년 4차당대회 김일성수상의 훈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1년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화되었다. 7-8월을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월간'으로 설정하여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 및 개별 근로자들간의 노력경쟁운동을 집중적 전개한다. 정무원과 각 도의 행정·경제지도 위원회가 주요부문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의 '표준공장'을 설정한다.

15) 평양방직기계공장의 26호선반에서 '설비관리'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발단이 된 군중운동으로 1982년 6월 17일 북한 전역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노동자의 설비기

기계 새끼치기》운동¹⁶⁾, 《다수확군 쟁취운동》¹⁷⁾, 《2백일전투》¹⁸⁾ 등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앞 절에서 살펴본 '혁명적 군중노선'이 제도화되면서도 일상성 속에서 관료주의·형식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대중이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자신이 사회건설의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군중운동의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해 보겠다. 한편, 군중운동이 북한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모아 내는 데 성공했다고 치자. 그런데 한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많은 상시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군중운동에 주민들이 동원됨으로써 상시적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계획을 수행하기란 거의 어려워진다. 1992년 『하얀꽃』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기계개발을 군중운동방식으로 진행하여 많은 일손이 군중운동에 필요하게 되자 일상적인 생산계획의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 영화 말고도 『바다를 막는 사람들』이란 서해관문공사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도 바다공사에 다른 지역의 일손이나 운송장비 등이 차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일상적인 생산·운송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다른 한 편, 앞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운동'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군중운동 자체의 형식주의·요식주의화될 가능성은 사회가 경직될수록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군중운동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물질적 요인이 불충분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창조성이나 자발성을 담아 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 특히 북한대중은 1996년 대기근을 여전히 군중운동 방식으로, 영웅의 정서로서 간

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그들의 작업관리정신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고분투의 정신으로 버티고 있다. 군중운동의 일상화는 유사 이래 최대의 악재를 견뎌내는 동력이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4. 북한의 공문, 군(郡)

혁명적 군중노선이나 혁명적 군중운동 외에도 북한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 중 하나로서 지역의 자력갱생단위로서 군거점전략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거리 곳곳에 "자력갱생, 간고분투", "자력갱생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표어를 드높이고 있다. 물론 이 표어들이 새삼스럽게 등장했거나 홍수의 후유증으로 등장한 것은 더욱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에야 말로 이러한 구호가 더욱 실감나는 게 아닌가 싶다.

자력갱생의 단위는 외국에 대한 국가나 사회에 대한 개인만이 아니다. 흔히 북한을 중앙집권제의 나라로 알고 있으나 북한은 중앙의 강화와 지역의 자립·자율을 이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자력갱생을 1960년대 초반부터 '군거점¹⁹⁾'이 추

16) 이는 50년대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 기원을 두고 1985년 6월 김일성주석이 함북내 현지지도를 하던 중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을 군중적 사업으로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진기계를 현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선진기계를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현대화시키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80년대 북한의 기계설비의 노후와 경제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17) 1989년 알곡생산목표 1천5백만톤의 알곡생산기지를 점령하여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경쟁운동으로서 20만톤군, 18만톤군, 15만톤군, 12만톤군, 10만톤군, 7만톤군, 5만톤군 등으로 차등화시켜 목표를 제시하여 군들간의 식량증산경쟁을 유발시키려는 운동이다.

18) 88년 2월 20일부터 그해 9월9일 정권 창립 40주년까지의 2백일 노력투쟁. 특히 이 운동은 1989년 세계청년축제를 앞두고 건축물들을 앞당겨 완공하려는 야심찬 운동이다.

19) 1990년 들어 남한에서도 도·농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된 국가발전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을 하기 위해

구하여 왔다. 군거점전략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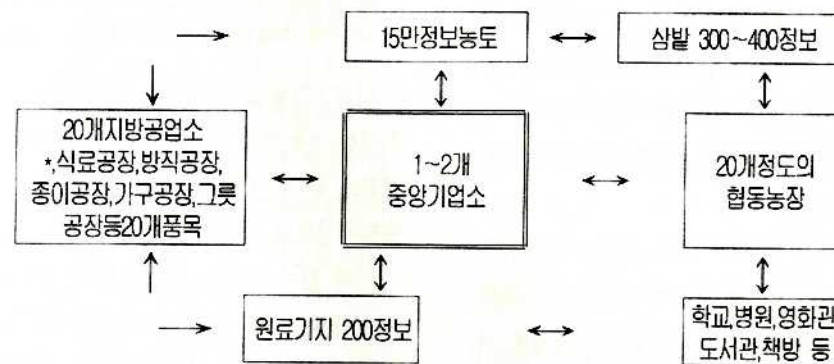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수된 바탕 위에서 북한은 1962년 창성연석회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여 '군20거점'을 중심으로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일제는 대동아전쟁 전에는 한반도를 농촌 중심의 사회로 고정시켜 오다가 전쟁 전후시기부터

균형적인 도농성장이 파괴되는 일이 남과 북에 공히 존재하였다²¹⁾.

따라서 북한은 민주개혁 시기부터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거듭 강조하며 농공병진책을 추진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을 채택하였다. 1958년 6월 전원회의에서는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

북한의 군거점개념 <그림 2>
(*는 1991년 9월 현재 수치)



북공남농정책에 의해 북부지역에 중화학 중심의 공업기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일본에 예속되어 공업 부문간 연계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기술적 자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륙전진을 위한 병참기지로서 역할 하였다. 또한 공업지대는 일본과의 해상통로를 위해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함포사격에 의해 거의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과의 연결점, 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발전함으로써

군을 주체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을 경제적이며 사회적, 생태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있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최외출 외,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의 배경과 실제-영천군을 중심으로", '환경연구', 1992, 5쪽.

키기 위한 방침이 정해졌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북한 각지에서 그 지방의 필요와 특색에 맞고 원료산지에 접근하고 소비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섰다²²⁾고 한다. 또 한편 1958년 8월 전

20) 북한의 군은 규모설정기준에 의해 1952년 대군제(大郡制)에서 중군제(中郡制)로 축소 조정되었다. 일제에 의해 1910년 만들어진 '면'을 없애고 여러 개의 면을 재분할, 병합하여 94개 군을 168개의 군으로 증설하였다. 10,120개의 리를 3,658개 리로 병합 개편했으며 군의 중심 리를 선정하여 읍을 설치했다. 또한 40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가 거주하는 광산, 여촌, 공장, 기업소에는 노동자구를 신설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서울, 같은 곳 펴냄, 1990, 58쪽

21) 김의원 외,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제 24권 2호, 1989, 17쪽

22)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1964. 3. 18)", 『북한원전 김정일 저작선』, 1991

사회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수된 이후로는 계획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일관성 있는 상품유통, 가격, 신용체계 등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이 도처럼 크지 않고 리처럼 작지 않은 단위로서 군을 설정하였다. 군은 국가의 말단지도단위로서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 꾸려졌다. 한개 군에는 평균 20개 정도의 협동농장, 15만 정보의 경지, 농업에 봉사하는 국영기업, 평균 10개의 지방공업(80년대 이후 20여개 지방공업으로 확대)과 기업소, 1~2개의 중앙공업소를 갖도록 조성하였다²³⁾. 군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방공업의 중심지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주체는 군당위원회이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공업 및 기업소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주거지는 평균 거리 15분 이내의 위치에 배치하여 보행으로 원칙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을 두도록 하였다. 만약 직장을 옮기게 되면 다시 직장 근방 주택을 배정 받으며 빈집을 배당 받을 때까지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²⁴⁾.

한편 도, 시, 군의 경제·행정기관들, 협동농장들이 지방자치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실시하였다. 시, 군 지방예산 수입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나온다.

첫째, 시, 군 지방산업공장, 상업 및 사회금융, 편의봉사 부문 기업소 등 시, 군 살림살이에 속한 기관, 기업소들에서 바치는 거래수입금, 둘째로 중앙 및 도에 속한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이 바치는 지방유지금, 셋째로, 도에 속한 기업소

들이 바치는 국가재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하였다²⁵⁾

이러한 수입원천에서부터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 1976년에는 1975년에 비하여 109.7%, 1977년에는 전년에 비해 124.4%나 늘어나게 되었다²⁶⁾고 한다. 1970년대 모든 지방들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게 되었다. 지출내용을 보면,

생산적 시설의 기본건설 및 대보수자금, 협동농장들에 대한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금,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건설, 다리의 보수, 강하천정리,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자금, 국가 식량공급가격편차보상금을 비롯하여 대중들의 복리를 위한 보상금, 시, 군 안의 택시소, 유치원, 학교, 병원을 비롯한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의 건설 및 보수 자금,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지출, 시, 군급 관리기관들의 유지비²⁷⁾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종 군의 편의시설이나 경제·행정기관들을 군 자체적으로 운영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여기서 쓰고 남은 돈을 중앙예산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은 중앙에 대해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예산 운영과 관리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미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음은 북한의 독특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은 지방경제의 발전 거점일 뿐 아니라 지방민들의 정치·문화 생활의 중심지로서 이미 오래 전에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군은 지방민, 지방경제의 자력갱생의 단위가 됨으로써 중앙은 지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중앙집권제의 방대한 기구의 비효율성을 일정 정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의 동요와 좌절로 인

24) 주종원 외,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연구』, 『국토계획』 제27권 3호, 1992, 81쪽

25) 김덕운, 『재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134쪽

26) 위의 책, 142쪽

27) 앞의 책, 135쪽

해 북한이 그간 취해온 자립경제건설노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노선 하에서 생길 수 있는 핵심적 문제 중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에너지 수입을 30% 이내로 유지하려는 원칙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주로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입을 30% 이내로 유지하고자 함은 1970년대 에너지 파동과 그에 따른 국제 경제 공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미봉책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등의 대북경제봉쇄정책과 대외교역의 경화결계문제를 심화시키려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중앙경제 부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제에서도 각종의 문제를 파급시킨다. 동력문제는 고사하고 많은 지방경제 부문들이 중앙석유화학공업에서 나오는 중간재들을 재료로 쓰는 일상필수품생산인데 이 생산에 문제가 걸리게 되면 결국 지방예산원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 되면서 경제전반의 문제로까지 파급되게 된다.²⁸⁾ 더욱이 북한에서 빈번한 한해, 냉해 사태와 최근과 같은 예기치 못한 홍수문제까지 발생하여 농업생산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방경제란 완전히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을 거점으로 한 자력갱생의 운영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군이라는 사회경제정치생활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북한 사회가 상상을 불허하는 긴박한 상태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고 담담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간단하

28) 이 글에서는 이 논의에 집중하지 않겠다.

게 살펴보았다.

첫째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혁명적 군중노선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와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집단적인 조직적 훈련을 받아냄으로써 가능하다. 둘째는 혁명적 군중노선과 더불어 군중운동의 일상화가 유사시 상황에서도 상호비판을 통해 협동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이 국가나 개인들의 구호일 뿐만 아니라 경제나 행정이 운영되는 원리에까지 파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원리들은 북한대중들을 나름대로 자기 사회에서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이며 국가와 개인을 일치시키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된다.

물론 이 글은 북한주민이 이러한 고통을 계속 참고 견디어 낼 것이라거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더라도 북한사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다만 한 체제의 위기가 붕괴를 단일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파악하는 시각을 경계하고 의문시할 뿐이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위기의 지속으로 북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해악적인 요소가 되었으면 되었지 남북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우리는 역으로부터 물질적 토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정신적·문화적 요소들을 물려받는다. 1960년대 이후 발전시켜 온 물질적 부와 독재의 역사적 교훈이 남한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북한이 일구어 온 사회운영원리도 통일조국의 한 자산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50여년간 발전시켜 온 사회구성원리를 통일의 관점에서 냉정히 객관화시켜 볼 때이다.

북한 경제와 남북 경험

이 태 섭 (지식인연대 회원)

1. 지력 갱생과 대외 개방의 병진

현재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회생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재·에너지·수송 문제, 낙후된 기술 및 설비 수준, 수출 부진, 외화 부족, 자본 부족, 근로 의욕 감퇴, 설비가

기관	총 수요	실 생산	연간 부족	홍수 피해	96 부족량
우리 정부	563	345		(60)	208
FAO/WFP	599	408		(89)	191
농촌경제연	연 650-700	연 400-450	약 200	150	350
북한 당국	연 763	연 566	연 197	190	387

<표 1> 북한의 곡물 수급 실태 (단위 : 만 톤)

등을 저하 등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북한 경제는 90년대 들어 6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홍수 피해로 인해 올해 북한 경제는 식량난을 포함,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난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지력 갱

생·자립 노선의 한계와 대외 무역의 감소, 둘째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셋째 군수산업 육성과 같은 중공업 우선주의 발전 노선의 한계 등이 그것이다.

중공업 우선의 발전 노선은 93년 12월에 채택된 완충기 신경제 전략(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4

년도 재정 계획을 1993년도와 같이 건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농업·경공업 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율을 1993년 2.8%, 4.0%에서 1994년 6.0%, 5.4%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가고 있다.

국 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중 국	30	62	74	30.5	15.3
캐나다	35	8	16	-	-
태 국	9	2	7.8	5.2	16.2
일 본	-	-	-	-	37
기 타	55	11	11.5	13.3	27.7
계	129	83	109.3	49	96.2

<표 2>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단위 : 만 톤)
주 : 기타에는 한국, 일본, 국제기구 등의 수혜 지원분 포함

북한의 공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이후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 즉 92년을 고비로 중공업은 92년 74.4%, 93년 72.5%, 94년 70.3%로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철광석(만톤)			843	816	574	476	458	421.1
석탄(만톤)	4,070	4,330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전력(kwh)	282억	294억	277억	263억	247억	221억	231억	230억
원유(톤)			252만	189만	143만	134만	91만	110만

<표 3> 북한의 원자재 및 에너지 실태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KOTRA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93
1인당 평균 생산지수	100	101.0	101.2	100.7	94.2	85.4	76.3	71.4
전년비 증가율	-	0.9%	0.9%	- 0.9%	- 6.0%	- 14.7%	- 11.1%	- 6.8%

<표 4> 1인당 평균생산 지수와 그 증가율

자료 : 통일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공업은 92년 25.6%, 93년 27.5%, 94년 29.7%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북한의 산업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27.9%에서 94년 29.5%로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94년도 북한의 군사비는 56.6억 달러로 전체 예산 188.8억 달러의 30% 수준이다. 북한의 경제 상태나 경제 규모로 보아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비 삭감이 요구되며,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필요로 한다.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이 요구되며, 그 방향은 黨→政→企로의 분권화일 것이다. 북한에서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분권화 경향은 80년대 중반 제한적으로나마 추진된 바 있다. 먼저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무역 체계의 분권화(81년), 독립채산제의 전면 실시(84년), 연합기업소 도입(85년), 성과급 임금제 도입(86년) 등을 통해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증대시켜 보고자 하였다.

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도의 경제적 권한과 책임 증대(81년), 지방에 가격 결정 권한의 일부 이

양(80년대 후반) 등 지방의 권한과 책임도 증대시켜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84년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을 통해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같은 해 소비재 공급 증대를 위해 경공업 혁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경제난의 심화 속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무역 체계의 도입과 같은 무역에서의 부분적인 분권화 조치를 제외하면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90년대 북한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첫째 체

제 불안정성 때문이다. 안정 회귀 심리는 대개 변화를 거부하기 쉽상이다.

둘째, 소비재와 같은 물자 부족 현상의 만연이다. 부족의 경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권화와 같은 선분론 개혁 조치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와 개

자력 갱생 노선 역시 경제 발전 노선으로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가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 목표로 남아 있는 한, 최근 각 郡의 자생·자위력의 증대를 위한 소왕청 전위군 창조 운동의 전개와 같이 체제 생존을 위한 자력 갱생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투자 상담	합의서 또는 의향서 체결 건수	투자 계약		실제 투자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23 개국 400 여건	120건	33건	3억 5천만 달러 (이중 2억 달러는 95년 체결)	16건	2천만 달러

<표 6> 96년 2월 현재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

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당의 지도적 역할 등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체의 원자재와 자체의 기술 한계로 인해

보인다. 자력 갱생에 기반한 북한의 자립 경제는 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자력 갱생과 아울러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대외 무역의 감소이다. <표 5>는

연도별	무역총액	무역 의존도	경제성장률	재정 증가율	연도별	무역총액	무역 의존도	경제성장률	재정 증가율
1970년	8.1	25.3	(31.0)	18.9	1983년	28.3	19.6	4.4 (12.2)	8.2
1971년	9.1	26.0	(15.9)	5.0	1984년	27.3	18.5	3.9 (2.7)	8.9
1972년	10.4	24.8	(16.0)	17.2	1985년	30.7	20.3	2.7 (2.7)	4.5
1973년	13.4	25.8	(18.9)	12.5	1986년	36.0	20.7	2.1 (2.1)	4.1
1974년	19.8	33.6	(17.1)	16.3	1987년	41.4	21.4	3.3 (3.3)	6.8
1975년	19.1	29.4	(20.0)	17.5	1988년	51.5	25.0	3.0 (3.0)	4.2
1976년	15.3	19.9	(10.9)	8.4	1989년	47.9	22.7	2.4 (3.0)	5.4
1977년	15.2	17.7	(-4.0)	8.3	1990년	47.2	20.0	-3.7	6.8
1978년	20.8	19.8	5.6 (16.9)	6.0	1991년	27.2	11.9	-5.2	3.9
1979년	27.9	22.5	6.9 (14.9)	20.0	1992년	26.6		-7.6	6.5
1980년	34.2	25.3	3.8 (1.7)	11.0	1993년	26.4		-4.3	2.4
1981년	28.3	20.9	2.0 (2.5)	7.9	1994년	21.1		-1.7	
1982년	32.3	23.8	4.8 (12.2)	9.2	1995년	20.5		-4.5	

<표 5>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무역 총액 단위 : 1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통일원, KOTRA
주 : ()은 환의각 추정치
고승호 : 80년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추정

북한의 대외 무역과 경제 성장 사이에 대체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 무역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졌는데, 북한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오히려 대외 경제 개방의 확대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즉 <표 5>에서 보듯 80년대 대외 무역이 감소하던 84년에 북한은 합병법을 채택하였으며, 90년대 대외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던 91년에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력 갱생의 한계 속에서 북한은 경제 회생의 활로를 대외 경제 개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서방과의 경제 관계 확대는 북한의 경제 발전에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체제 생존을 위한 자력 갱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개방의 병진 노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내 개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제한적인 체제 유지형 대외 개방의 일정한 성공적 추진은 침체에 빠진 북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지만 외자 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북한은 대외 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북미 관계 개선이라 보고, 현재 북미 관계 개선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클린턴의 발언에서도 보이듯 북한과 미국은 현재 제네바 합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현상 유지를 선호하면서 최근 대북 경제 지원 등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변 정세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과 북한 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까지 향후 3~4년은 여전히 경제 침체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북한은 이른바 '백두 밀립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끝까지 버텨보고자 할 것이다. 김정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난날 항일 혁명 투사들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때우고 풍찬노숙하면서 굴함없이 싸운" 혁명 전통의 오늘날의, 그러나 시대착오적 계승인 것이다.

2. 남북 경험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

현단계 남북 경험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남북한의 물자 교역은 <표 6>에서도 보듯 남북 관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95년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0.2%, 91년 4.0%, 92년 6.4%, 93년 7.2%, 94년 9.0%로 증대되어, 한국은 북한의 3대 무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교역은 대부분 남한의 반입 위주의 간접 교역 방식이며, 특히 위탁 가공 교역이 급성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비금속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남한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상품의 반입과 직교역에는 아직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투자 협력 사업의 경우 논의만 무성할 뿐, (주)대우의 남포 공단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남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

는 바 크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 경협을 4자 회담이나 남북 대화 재개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대북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북 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소 이중적이다. 외자 유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남북 경협이 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 차원의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북한은 제한적·선별적·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 경협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남북 경협에 보다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될 때는 한국 경제와 비교하여 북한 경제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 또는 체제 유지에 대한 일정한 자심감이 생길 때 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까지 북한은 미·일 등 서방 자본의 유치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여건 조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남북 경협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남북 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보다는 오히려 미·일 등 서방과의 경제 관계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구분	반출입 승인 현황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반입	반출	합계	반입	반출	합계
1988년	1,037	-	1,037	-	-	-
1989년	22,235	69	22,304	-	-	-
1990년	20,354	4,731	25,085	-	-	-
1991년	165,996	26,176	192,172	23	13	36
1992년	200,685	12,818	213,503	556	413	969
1993년	188,528	10,262	198,790	4,385	3,611	7,996
1994년	203,521	25,423	228,944	16,598	11,966	28,564
1995년	236,075	73,751	309,826	26,490	20,747	47,237
총계	1,038,431	153,230	1,191,661	48,052	36,750	84,802

<표 7> 연도별 남북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 현황 (단위 : 1,000 달러)
 자료 : 통일원 주 : 對北 쌀 지원은 제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한국 물품의 국적 표기 금지 등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인적·물적 요소에서 한국의 국적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이라 하더라도, 체제 안정과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 카드의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 카드는, 핵·경협 연계 정책의 실패에서 보듯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의 4자 회담·경협 연계 정책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의 4자 회담 수용 가능성이

사업자	사업 내용	투자 지역	투자 금액	복속 회사	승인 일자
(주)대우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	남포	512만 달러	상천리 총회사	95. 5. 17
(주)고합물산	의류·봉제, 수지방, 직물, 이불·솜	-	686만 달러	광명성 총회사	95. 5. 17
(주)한일합성	슈타, 봉제, 모포방직	남포	980만 달러	은하무역 총회사	95. 6. 26
(주)국제상사	신발	남포	350만 달러	上同	95. 6. 26
(주)녹십자	유로키나제(혈전증 치료제)	평양	300만 달러	광명성 총회사	95. 9. 15
(주)동양시멘트	시멘트 저장용 싸일로 (1만톤 급) 1기	나진항	300만 달러	대외경제협력추진위	95. 9. 15
동원해운(주)	항만 하역 설비 (지게차 2대, 크레인 1대)	나진항	500만 달러	해양무역회사	95. 5. 15
삼성전자(주)	통신센터 건설, 운영	나진·선봉	700만 달러	조선체신회사	96. 4. 27
(주)태창	금강산 생물 개발, 판매	금강산	580만 달러	룡간 888무역 총회사	96. 4. 27
대우전자(주)	TV 등 전기 전자 제품 생산, 판매	남포	640만 달러	상천리 총회사	96. 4. 27

<표 7> 남북 '협력 사업' 및 '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자료 : 통일원, 「월간 남북 경제교류협력 동향」
 주 : 대우는 '협력 사업' 승인, 나머지는 '협력 사업자' 승인
 대우의 '협력 사업자' 승인은 92년 10월 5일임

점차 희박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패로 검증된 정책적 수단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증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면, 기존의 정경 연계 방식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기능주의적 방식에 따라 경제 분야부터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경 분리로 남북 경협의 폭과 속도를 보다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협을 앞세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방안이다. 상호 불신과 대결 관계에서 단숨에 화해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협력있는 대결 관계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이끌려가기 보다 그에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정부의 결단,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 경협은 점진적으로나마 점차 확대돼 나가겠지만, 경협이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증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남북한 역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 관계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북한 역시 점진적인 체제 변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체제 개혁을 위해 우선 개방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격화될 남북 경협의 추진 방향은, 남북 기본합의서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민족 성원의 共存, 共榮, 共利이다.

중국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이희옥 (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1. 개관

1)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에 대한 의견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사회주의' 내포의 공허를 수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87년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따라 전진하자'는 보고 이후 중국적 사회주의의 '중국적'이라는 역사특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수정은 이론적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맑스가 파리로뮌 실패 이후 자본주의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사회주의혁명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다는 관점을 수정했다는 것에 지나치게 의

미를 부여하여 '각국의 길에는 각국의 길이 있다'는 식의 동방사회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지배이론이 맑스주의자학(Marxistology)에서 맑스학(Marxology)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전히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당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모두 희석한 셈이다.

그 결과 중국사회는 성장과 정치안정을 동시에 강조하는 사회주의판 개발독재의 담론이 유포되고 있으며,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사회주의판(?) 양극 분화가 확장되고 있다. 개혁개방은 새로운 계급계층의 이동을 촉진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노동자계급 등이 개혁개방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역설이 만연하고 있다. 실제 중국사회를 움직여 왔던 국유

경제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동조직의 어용성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의 결핍에 따라 노동자 실업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신권위주의, 신권력론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통제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함께 중국사회는 일단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안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고있다.

2) 대만정치의 보수연합

대만은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총통을 선거하는 등 제한적 민주화를 실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가 대중적 이익을 관철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변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지배권력을 공고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국민당은 여전히 언론을 독점하는 한편 관료자본과의 정치적 유착에 따른 권력형 부패 뿐 아니라, 폭력조직과의 유착 등 전근대적 요소는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반면 대만야당인 민주진보당은 과거 대만의 폭압적 지배 속에서 나름대로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의 운동노선은 대체적으로 대만독립에 지나치게 경사되어 '분단과 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 대만출신 현지인의 지역정서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그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국내적 조건이 열악하여 주로 해외운동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후 합법공간에서는 대만 신흥자본자본과 정치적으로 유착하면서 보수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민당과 민진당이 손잡고 '스파이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진보운동

과 통일운동의 근거를 뺏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진당과 민중세력의 정치적 지향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정치의 보수드라이브는 유사한 경제적 규모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노동운동의 위축과 노동조합의 어용화, 학생운동의 부르조아화와 맞물려 방향을 잃고 있다. 더구나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하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보수정당의 물적 토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국민당이,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민진당이 반대하거나 탄압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과 대만의 통일논의

중국과 대만의 통일논의는 당파의 속성, 거주환경, 양안정부와 민중의 신뢰도, 국제환경이라는 변수에 의해 변용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안·대결·역제안'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대만은 결국 통일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중국통일의 모형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단일국가형이나 전형적인 연방형태(federal state) 또는 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분산되는 이른바 이완된 연합(confederal state)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양안의 현실적인 국제적 지위, 지정학적 조건, 분단과정, 국력차이, 국가규모, 정통성문제, 통일고조기의 내외정세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변용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두

개의 제도(一國兩制)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륙의 현저한 붕괴가 없는 한 대륙중심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대만, 홍콩, 마카오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당대당 형식으로 통일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이 '제3차 국공합작'의 형식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근거한다. 이른바 대만이 주권문제를 양보하면 대만자본주의의 발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만에 대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대한 대륙식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대만문제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화 보다는 우회적 통제나 기능적 교류의 확대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대만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대만자본에 대한 우대정책 등 유인체계를 통해 대만과의 기능적 교류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대만은 국민당 등 지배정당이 걸로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내용적으로 '하나의 국가·2개의 정부(一國兩府)'나 '하나의 중국·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의 개념은 '문화적 중국'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주권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1국가·2지구(一國兩區)'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지역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다른 법적 기원을 가진 민사사건의 법적 충돌의 처리에 유리하고 한동안 쌍방이 현재의 모형을 가지고 교류확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 모든 주장의 기저에는 대만정부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격하될 수밖에 없고 대

만의 자치보장도 중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주장하는 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전인대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통일형식은 대만정부의 주권포기와 중국이 주권확장이라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를 대만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통로를 통해 주장하는 이유도 대만이 법적인 주권국가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유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다변적인 탄력외교도 이러한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안의 통일논의 밖에서는 3개 중국론, 중국인 공동체, 중국연방 다체제국가, 대중국연방제, 독일방안, 1국가·2제도·3정부, 연방제 통일안등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치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최근 대만해협 위기와 동북아정세

1) 배경

첫째, 중국 권력집단내의 갈등이다. 특히 이 갈등은 당과 군이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군의 정치개입의 폭이 강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당이 군을 통제해 왔다. 장쩌민 집권 이후에도 양상쿤(楊尙昆), 양바이빙(楊白冰) 등 정치지향이 강한 군세력을 후퇴시키고 비교적 중립적인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류화칭(劉華淸)라인이 등용하여 당이 군을 통제하는 구도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장쩌민의 권력장악력이 약하고 군내기반이 없으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산

등파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와의 정치적 타협 속에서 군의 정치적 개입수준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 당정지도부가 산등파를 배제한 채 유연한 대외 군사전략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2002년 하계 올림픽 유치 실패를 계기로 현재의 당정세력이 지나치게 유연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부의 반발이 강한 상태에서 대만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하여 긴장요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이 적극적으로 군의 강경한 요구를 수렴하여 군부와의 마찰을 줄이고 정국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에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중국흔들기'정책이 권력교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인식해 왔다. 미국은 최근 인권문제, 최혜국대우 연장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WTO가입저지, 중국미사일 판매문제 등 연이은 카드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더욱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리명후이의 방미 허용 등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중국내부를 시험해 보려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단결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영토문제라는 원칙적인 카드에서 밀리면 지속적인 '양보의 도미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은 이번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연한 타협의 여지를 봉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

셋째, 대만총통선거에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하고자 했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을 근대에 잃고 현대에 다시 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실지회복이 없는 한 중국의 근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내전의 연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다. 이점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상호의존과 합리적인 외교스타일에도 불구하고

고 대만문제에 관해 경직된 자세를 보여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대만총통선거기간 중 국민당이 대만독립을 명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여 대만인의 불안심리를 자극했으며, 이를 통해 유력한 당선후보인 리명후이의 당선을 막거나 득표율을 하락시켜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목표는 리명후이가 압도적 지지를 얻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대만에 대한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살린 셈이다. 왜냐하면 대만의 '독립열기'가 강해질수록 양안긴장도 가중되고 그것은 그대로 대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을 주지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훈련을 통해 홍콩반환을 앞둔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 경고하고 '동요없는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효과도 함께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훈련이 종료되었으나, 대만해협의 충돌가능성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훈련이 '시위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통상적인 훈련이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목표보다 행동의 수위를 높히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도자와 군부의 퍼스넬리티에 따라 '계산된 긴장'이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내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양안위기와 동북아의 새로운 세력균형

군사훈련이 끝난 후 양안긴장은 일시적으로 잠복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갈등

의 뿌리가 깊어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재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항상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전체를 위한 대만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대만문제의 국제화'가 개혁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리명후이는 총통 당선 이후에도 일면으로는 양안간의 호혜적 관계를 주장하면서도 유엔재가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대만은 대만본토·평후(澎湖)·진마(金門) 지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안위기는 평화적 해빙 대신 국제적인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냉전의 분위기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 지역당사국에 다양한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며 동아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아시아의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에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것은 미국의회의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미국의 선택>에서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분쟁, 대만과의 대립 등으로 수년 이내에 아태지역에서 미국이익을 크게 위협하는 세력으로 대두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행동은 인민해방군의 능력한계, 군사행동의 명분부족, 정치경제적 이익, 외국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현재로서는 억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전체의 명분을 '역내 국가들이 구소련 해체 이후 권력진공을 미국이 데워 안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고 역내 국가들과 쌍무적 안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전진배치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양안의 군사위기 이후 가장 인상적인 변화의 하나는 미일간의 새로운 안보동맹체제의 구축이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 주둔 미군을 10만명선에서 유지하고 일본과는 1978년에 체결된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여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공동 군사작전 계획수립 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맹체제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동북아 강대국의 좌표 이동에 따라 일본을 군사적 위협국가에서 안보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이 동북아의 지역방위를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예상되는 중미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중국시장 공략에 실패하고 일본에게 상대적 이익을 넘겨주게 되는 구도를 방지하고자 했다. 셋째, 이 체제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일본이 독자적인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강국화를 경계하고자 했다. 넷째, 일본은 '구소련의 극동 침공에 대응한다'는 기존의 방위개념을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로 '재정의'함으로서 아태지역에서 기존의 종속적 역할에서 미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동맹국으로 격상했다.

또하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조정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안 군사적 갈등 이후 미국의회의는 대만관계법안을 포함한 외교관계 및 해외원조 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리명후이 총통의 연내 미국초청, 대만의 WTO가입 지원, 미국주재 대만경제문화 대표부를 타이베이 대표처로 격상하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용 무기판매를 규정한 대만관계법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판매 감축을 명시한 82년의 미중간에 체결된 8.17 공동성명에 우선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물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나, 양안위기 이후 미국내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정부가 대만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흐름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역내국가들은 양안위기에 의한 새로운 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를 제고하고 자국방위의 수준을 넘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군비경쟁'을 선호하고 있다.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당사국인 동남아 각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 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역긴장이 지속될 경우 일부 국가들이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하는 등의 민감한 사안들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최근 안보관에 일대 수정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군사훈련의 평가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주변국가의 흐름에 대해 두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전방위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국과 대만에 대한 지지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장쩌민 총서기를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전세계적 범위의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대만의 주권 외교활동에 썩기를 박는 한편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제3세계 지역에 대한 지원외교활동을 강화했다. 그리고 군사훈련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리펑(李鵬)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여

유럽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일안보동맹이 동북아질서를 깨트린다는 차원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러 대항축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4월 24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러공동성명을 채택하고, 4월 26일에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5개국 국가원수들이 참여하여 '국경지대 군사분야 신뢰강화에 관한 협정(상하이 협정)'을 체결한 것도 미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북방견제축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정책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양안갈등이 야기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의 흐름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위기의 모든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쟁점을 풀어 가는 것은 필요한 수순일 것이다. 첫째, 미국은 사실상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기적으로 한 대중정책이 '관여전략(engagement policy)'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중국에 명료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1995년 미국과 베트남 국교정상화, 리명후이 대만총통의 방미허용, 파키스탄에 대한 전투기 판매 등 일련의 사태는 중국봉쇄정책으로 보일 혐의가 짙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신미일안보체제의 구축이 중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일본의 구체적인 군사대국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체제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만은 독립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유연한 교류에 기반한 사실상의 '1국가·2체제'로 수립하는 통일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표했으나 보다 투명한 군사정책을 통해 패권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지역내의 신뢰를 쌓아 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변국가들은 이러한 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국안보 우선전략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집단안전보장의 틀을 통해 집합적이고 건설적 개입을 위한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양안위기와 한반도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양안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상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갈등의 성격이 양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미관계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전의 60년대 중소분쟁시 중국과 소련간의 등거리 정책을 수행했던 것과 같이, 이번의 양안위기를 전통적인 맹방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이러한 태도는 <로동신문> 등에서 사실보도 없는 침묵으로 일관한 데에서도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사건 직전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과 북미간의 직접회담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안위기가 끝난 후, 한미정상은 '4자회의'를 제안하여 동북아 질서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했다. 이것을 4자가 모두 수용하는 데에는 북한의 수용형식 등이 남아 있으나, 남북한의 대화의 분위기가 선행된다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의 제의가 양안긴장 이후 중미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한미당국이 제기한 형식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수

용변수 등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긴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와 새로운 사태발전을 계기로 기존의 사고를 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방위 부담의 확대를 통한 대국화와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일안보체제는 한반도의 현상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축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일 동맹체제가 동북아에서 중일간의 대리전 형식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분단된 한국'은 수동적인 선택을 강제받을 소지가 넓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단순한 제안대결(proposal confrontation)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이익과 동북아 질서재편 속에서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안위기에서 보듯이 중국의 급부상과 조금한 대국화 논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규정력이 일정하게 발휘되는 상태에서 외교우선 순위를 냉철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2+2평화보장체제'의 적실성을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수용을 외적으로 강제하는 형식보다는 남북한 내부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간의 적극적 대화는 궁극적으로 대중국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북한 걸림돌이 해소되어 한중관계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북중관계 변화의 촉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북한의 발목을 잡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이 일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연구

- 독일 통합 5년의 중간 결산

이 해 영 (한신대학교 정치학 교수)

1. 문제의 소재

: '특수사례'로서의 구동독

2개의 독일이 하나가 된지 5년이 지났다. 역사적 이벤트에 대한 '중간보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에서 부단히 통합의 성과를 선전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운동의 주체이면서 통합 결과 피해자로 전략해 버린 구동독의 '보통사람들'의 항의, 통합의 수혜자 특히 구서독의 이른바 '정치계급'에 대한 항의가 만만치 않다. 2개의 독일은 아직 '통일' 되지 않았다.

양독의 통합은 분명 현존 사회주의가 붕괴한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양독 중 어느 한 쪽에서 장기간에 걸쳐 목적의식적·계획적으로 추진한 어떤 정책, 예컨대 통일정책의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낡은 정치 및 경제체제가 정리되는 방식

과 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독의 통합(법률적 의미에서 구동독의 구서독, 곧 독일연방공화국에의 '가입')은 현존 사회주의 붕괴 이후 소·동구권의 다른 사회주의국가군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특수한 사례(Sonderfall)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구소련에서는 구체제가 서로 다른 노멘클라투라집단 간의 권력투쟁과 소속 공화국 내의 민족분쟁으로,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우선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와 구세력의 '항복'으로, 폴란드에서는 신·구세력간의 '타협'으로,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정파간의 선거를 통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할 때 구 소·동구권 국가들과 비교해 구동독 경험의 특수성은 우선 다음 몇 가지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정치적·법적 측면에서 볼 때 양독은 어떤 협상의 결과 합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동독이

지니고 있던 국가성(Staatlichkeit), 다시 말해 주권이 완전 해소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구서독의 정치제도와 법규범의 단순 이전 혹은 이식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흔히 세계사에서 보듯이 군사력을 동원한 병탄이 아닌 자발적 복 속의 양태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이러한 '자발적' 동의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구동독 국가 해체의 전위역할을 수행한 바 있던 구동독 시민운동세력의 운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본주의화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전제를 마련한 지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단되고 있다.

둘째,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었던 구서독의 대외적 민주주의, 다당제 그리고 법규범의 일방적 이식은 현존 사회주의의 제도적 성과물, 예컨대 사회정책과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들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구서독의 지속적 민주개혁과 제도 보완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전혀 정치세력화되지 못하고 단지 소수 의견에 머물고 말았다.

셋째, 경제체제와 관련해 볼 때, '현존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정하게 상이한 발전유형을 보였던 구 유고연방 및 헝가리와 비교해 구동독은 가장 '고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형 곧 '국가소유/중앙계획'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었다. 이 경제체제는 그러나 어떤 중간단계도 거치지 않고 극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구서독의 즉 국가의 거시계획적 조절기능에 의해 보완된 사적 소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편입되었다. 이는 동시에 구

동독의 지역경제가 곧바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개방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 즉 한편으로 그 소유형태에 있어 국가소유가 사적 소유로, 다른 한편으로 계획생산이 시장생산으로 무매개적으로 전환된 것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양독의 통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소유권 문제(들) 둘러싼 약 200만건이 넘는 소송은 급격한 체제 교체의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구동독 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화폐관계로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화폐관계가 사회생활의 중심적 구성원리로 도입되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는 구동독 주민의 '생활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는 것처럼 양독통합은 화폐통합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동독의 마르크화는 약 300% 평가절상되었고, 이러한 평가절상이 생산성 증대나 품질혁신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이상 구동독에서 생산된 상품이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3배 이상 인상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동독 지역경제의 사실상 붕괴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2. 양독 통합의 2가지 해석 모델 : '자유화테제'와 '식민화테제'

1989년 이후 소·동구권의 해체, 특히 양독의 통합 그리고 현재의 사태 전개에 이르는 세계사적 경과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두가지 대립되는 해석모델이 경합하고 있다.²⁾

1)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것은 Wesenthal (1994), S. 11 참조

2) 이하의 논의는 미하엘 브리의 글에 시사 받은 바가 크다. Brie

여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유화 담론(Liberalisierung)은 기본적으로 2차대전 이후 성립된 동서독의 분단 이후 체제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이데올로기 경쟁의 연장에 서있다. 다시 말해 이는 1950년대 동서냉전에 의해 각인된 아테나워정권 당시, 구동독정권에 대해 失地회복개념으로 접근하였던 '롤백(Roll back)' 정책과 60년대 빌리 브란트에 의해 대변되었던 사회민주주의적 신전력이었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전자가 '1민족 1국가' 개념을 완고히 주장한 반면, 후자는 이보다는 유연한 (70년대 이후 국제정치상의 데탕트 분위기에 상응하는) '1민족 2국가'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기초해 사민당정권은 그 자체로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당시 구동독 호네커정권의 2민족론(즉 사회주의적 민족 대 자본주의적 민족)에 기초한 2국가론과 타협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가 70년대 전반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당시 보수우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독일제국 영토에 2개의 독일인 '국가'가 존재하는 현상이 사민당 정권의 주도 아래 승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서독의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것을 근거지우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전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원주의적 대외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우위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동안 서독경제가 이룩한 성과에 기인한다. 그리고 구서독 '지배블록'의 놀랄만한 안정성을 보장해 준 경제성장과 복지자본주의는 그

(1994) 참조

자체로 가장 강력한 권력 자원이자 체제 정당성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70년대 후반 이후 소위 '신보수 헤게모니'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면서 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담론이 기존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장악하고 또 국가의 친자본적 경제정책과 시장급진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전의 '사회국가적' 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사회적 불평등 관계의 악화가 나타나지만, 결코 체제 정당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코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현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일반화하고 그것의 특수한 표현으로 구동독의 체제 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자유화 담론은 사실상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것은 구동독의 국가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일당독재에 다름 아니며, 구동독 경제의 낙후성은 단적으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화 담론에 따르면 통합 이후 현재의 구동독 지역경제의 붕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유산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화 담론과는 달리 식민화 담론(Kolonialisierung)은 무엇보다 통합 이후에 드러난 문제와 위기에서 출발한다. 후자는 이러한 '내적 식민주의'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 고향이 서독인들에 의해 '식민적인 방식으로' 정복당했다는 생각은 단지 현실에 대한 어떤 왜곡된 주관적인 상(像)만은 결코 아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구동독 경제와 사회의 식민화로 향하고 있다. 구동독인들에 대한 서구적 가치, 생활 및 작업 방식을 최대한 빨리 내면화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이미 식민적 사고방식이다. 이전 세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를 정복하였던 유럽

인들은 자신을 복음의 전파자로 그리고 발견된 사회를 원시적이며 후진적이라고 간주하였다. ... 이미 검증된 구조라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주인의 사고 도식에 맞지 않다면 가치없이 파괴되었다.”³⁾

그리고 식민화의 경험적 준거로 다음이 열거된다. 첫째, 구동독 대의기관의 신속한 철폐와 외지인 곧 서독인에 의한 신속한 접수 둘째, 토착엘리트의 청산과 파견엘리트의 수입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모든 기능을 서독 출신이 점하고 있는 점 셋째, 본의 재무성 관할 하에 있으며 동독의 주정부가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에 구동독 국유자산의 양도 넷째, 협상과정에서 구서독이 양보한 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 모든 보장과 연방수준에서 구동독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포기한 점 다섯째, 일자리·주택 혹은 심지어 문화시설과 구서독 제도를 맞바꾼 점.⁴⁾

이처럼 주로 통합의 결과라는 측면을 구동독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식민화 담론에 따르면 양독의 통합은 구서독 '제도' 즉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입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치적 자주성과 경제적 이해를 지불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다분히 역사철학적이기도 한 의문은 과연 구동독인의 자발적 대중시위 즉 이른바 '인민혁명'과 그 뒤를 이은 '민주적' 절차 곧 선거에 의한 정권 및 체제 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구동독인은 과연 이것까지도 원했던 것일까? 어쩌면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동독 지역 주민의 항의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Christian/Neubauer (1991), S. 216 참조

3.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1) 통합 이전 양독의 사회 및 노동관련 제도의 비교

양독의 통합은 구서독의 제도가 구동독으로 단순 이전됨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렇다고 할 때 특히 통합 이전의 동서독 노동법규와 사회보장의 제도를 선별해서 비교해 보는 것은 통합 이후의 구동독 주민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1) 사회보험과 연금보험

- 먼저 서독의 경우 노동자, 사무직을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연금보험 단체가 있으며, 그 외 직종별, 사업장별, 연령별로 관련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반면 동독의 경우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노동자, 사무직, 의사, 학생의 경우 <자유노동총(FDGB)>이 이를 관리하고, 생산협동조합원, 수산업, 수공업, 변호사, 자유직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 노동자와 사무직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은 월수 6,300 DM을 상한선으로 소득의 9.35%를 적립하고, 동독에서는 600 마르크(Mark)를 상한선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0%를 적립한다.

- 198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독에서는 연금지급액의 17.2%를, 동독의 경우 같은 해를 기준으로

4) Brie (1994), a.a.O., S. 9.
5) 이하의 내용은 다음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Backer/Steffen (1990), S. 346 이하.

47%를 각기 연방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 동서독 공히 65세 (동독에서 여성은 60세)를 정년으로 하며, 서독의 경우 예컨대 실업자와 신체부자유자는 60세가 정년인 것처럼 경우에 따라 탄력성을 두지만 동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연금은 서독의 경우 35년의 보험가입이 전제되는 반면, 동독의 경우 15년이며, 특히 3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녀 1인당 1년이 줄어든다.

- 연금지급액은 서독에서는 개인별로 차등이 있지만, 동독은 일률적이다 (예를 들어 근로연한이 25년 미만이면 월 170마르크, 40년 이상이면 월 210마르크를 지급)

- 평균연금액을 볼 때 서독은 1989년 기준 근로연한이 20년 미만일 경우 남성 504 DM, 여성 300 DM, 40년 이상일 경우 남성 2,050 DM, 여성 1,499 DM이며, 반면 동독의 경우 1988년 기준 379마르크이다.

(2) 산재 혹은 질병시 급여

서독에서는 산재 혹은 근로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6주간은 사용자가 임금과 급여를 지불한다(이른바 “노동법적 해결”(arbeitsrechtliche Lösung)). 이후 7주부터 78주까지(동일 질병의 경우 3년까지 한함) 의료보험공단에서 평상시 총급여의 80%를 질병급여(Krankengeld)로 지급한다. 반면 동독에서는 1978년 이후부터 평균 순급여액의 90%를 처음 6주간에 지급받는다(이른바 “사회법적 해결”(sozialrechtliche Lösung)). 그리고 산재나 직업병의 경우 질병급여는 전 기간(78주)에 걸쳐 평균 순급여액의 100%를

지급받는다. 이 때 당사자 개인의 질병급여 비율과 100% 사이의 차액은 사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7주 이후부터의 질병급여 비율은 자녀수와 별도의 '자발적 보충 연금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실업급여와 실업보조금

- 서독에서는 “노동촉진법(AFG)”에 의거해 실업시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혹은 실업보조금(Arbeitslosenhilfe)을 지급받고, 동독의 경우 “직업중계기간 시민에 대한 국가지원과 작업장 보상지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실업시 지원금을 받는다.

- 지급조건: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 이전 3년 내의 기간 중에 연방노동청에 최소 1년의 의무금을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업보조금의 경우 지난 12개월의 기간 중 최소 1일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최소 150일에 걸쳐 의무금을 납부한 고용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업보조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현재의 '궁핍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에 동독의 경우에는 실업자로 등록하기 이전 12개월 동안에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 지급비율: 서독의 경우 실업급여는 최소 1명의 자녀가 있는 실업자의 경우 68%, 실업보조금은 58%를 지급한다. 반면 동독은 국가재정에서 정상 고용상태에 있었던 자의 경우 500마르크를 분담하고, 이 국가지원금과 평균 순임금액의 70% 사이의 차액은 사업장에서 보상 지불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무기한 해고된 자는 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

- 지급기간: 서독의 경우 실업급여는 의무금을

납입한 고용기간과 연령을 고려하여 6~32개월, 그리고 실업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다. 동독의 경우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다.

(4) 출산 및 육아

- 동독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자녀 1인당 1,000마르크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노동자, 사무직 그리고 협동조합 소속원이 26세까지 결혼을 할 경우 5,000마르크까지 무이자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 출산휴가 및 장려금 : 출산 전 6주, 후 8(12)주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난 3개월의 평균 순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일 3.5DM에서 최대 25DM의 장려금 (Mutterschaftsgeld)을 지불하고 사용자는 이에 더하여 급여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동독에서는 출산 전 6주, 후 20(22)주 동안 사회보험으로 순급여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초산일 경우 신생아가 한살이 될 때까지, 세번째 혹은 그 이상일 경우 18개월이 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육아보조금(Kindergeld) : 서독의 경우 자녀가 16세 (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7세, 실업상태일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자녀가 1인일 경우 월 50DM, 2인일 경우 70~130DM 등). 마찬가지로 동독의 경우 10학년, 예외적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자녀가 1인일 경우 50마르크, 2인일 경우 100마르크 등).

- 교육장려금 :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독에서는 1,750DM과 취학아동의 수와 학년에 따라 별

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동독에서는 부양자의 소득에 따라 자녀가 하나일 경우 900마르크, 둘일 경우 950마르크를 지급한다. 그리고 동독의 경우 모든 대학생에게 월 200마르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유아원(Kinderkrippe), 유치원 : 1990년 현재 서독에서는 54,000 개의 탁아소 내지 유아원 자리, 즉 3세까지 해당 연령의 유아 36명당 1자리가 부족하며, 특히 베를린과 함부르크의 경우 자리의 40%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치원 비용은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불하는 데 1986년 현재 자리의 1/3이 부족하다. 유치원 개원 시간은 오전만이거나 전일제 탁아소의 경우 최장 오후 5시까지이다. 동독의 유아원의 경우 1988/89년 약 80%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었고, 유치원의 경우 3~6세 해당연령 층의 아동 90%를 수용하고 있었고 비용은 점심과 우유값을 제외하고는 무료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한다. 특히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지방 관서와 함께 유아원과 유치원 시설 확보에 책임이 있다.

- 임신중절 : 서독의 경우 임신부가 일정 기간 내에 자의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것(Fristenlösung)은 "위헌"이며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이를 해당 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승인해 주는 방식(Indikationslösung)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동독의 경우 임신 후 12주 내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중절이 가능한 방식(Fristenlösun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히 통합 이후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지만 결국 서독의 방식이 관철되었다.

(5) 노동법

- 해고 : 서독의 경우 포괄적인 해고방지 규정(Kündigungsschutz)은 6인 이상 고용 사업장, 6개

월 이상의 고용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한정되며, 인사 관련, 작업 태도 관련, 사업장의 사정에 관련된 해고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그렇지만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 후 4개월까지의 산모는 해고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신체 부자유자의 경우 해당 관서의 동의 하에서만 해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장협의회(Betriebsrat)위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반면 동독의 경우 해고는 해당 근로자가 직무수행에 부적격할 경우 오직 사업장의 사정과 관련된 이유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해고 통보 이전에 반드시 동일 작업장 내의 다른 부서나 다른 작업장에서 합당한 다른 일자리를 제시해야만 한다. 해고방지 제도는 노동계약과 동시에 유효하며, 수습기간에만 유효한 그러한 노동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해고 통보는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노동 규율 혹은 공민의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는 다른 일자리의 알선 없이도 무기한 해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반파시즘 투사와 나치 정권의 박해자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하며,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 등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

- 임시 고용 : 서독의 경우 임시고용은 고용법에 따라 18개월까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동독의 경우 작업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할 때 6개월까지의 한시 고용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보조인력으로 배치되었던 근로자는 정식 고용 내지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노동시간 제한 : 서독의 경우 작업시간 규정에 따르면 즉 48시간이며 단체협약에 의한 평균노동

시간은 주 38.55시간이다. 평균 휴가기간은 30일이고, 20시~6시 사이의 야간작업(다교대 사업장은 23시까지)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의 주당 노동시간은 6시~20시에 한해 최대 40시간까지이다. 동독의 경우 근로자의 약 75%가 주 43.75시간이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부의 경우 야간작업이 금지되어 있고,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돌보아야 할 식구를 거느린 근로자는 야간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 노동자위원회의 동의 아래서만 가능하며, 연간 20~26일의 휴가를 갈 수 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적어도 여기에 선별된 분야에 관한 한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 구동독이 구서독에 최소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독의 경우 '노동의 권리(Recht auf Arbeit)'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반면 서독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거해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할 의무만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구동독의 노동자들은 구서독과 비교해, 구동독 헌법과 「노동법전(Arbeitsgesetzbuch)」에 의해 사실상의 해고 금지라는 놀랄 만한 개인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통합과정에서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어 폐기되어 버린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대단히 적절하다. "구동독의 근로자들이 다수결로 원했던 완전한 체제 변혁이 특히 이 체제의 소유 구조와 결부되어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쓰라린 인식이 남아 있다."⁶⁾

6) Schmitthener/Böbke (1990), S. 641.

구서독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사회적 권리의 위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해 대변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인해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1949년 동독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의 결사 및 파업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조와 공장평의회'를 통한 노동자와 사무직의 공동결정권 역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1968년의 개정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물론 <자유노동(FDGB)>을 통한 이해 대변, 즉 법안 발의와 인민의회에 대표 파견을 보장하고 있지만 고전적 의미에서의 노조의 권리는 특히 사업장의 지도부나 국가에 반대되는 경우에 간단히 부정된다. 다시 말해 파업권과 자율적 임금교섭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구서독과 비교해 오히려 우월하거나 최소한 뒤지지 않는 구동독 노동자의 개인적 권리는 자주성이 관료주의적으로 억압된 정치적·사회적 기반 위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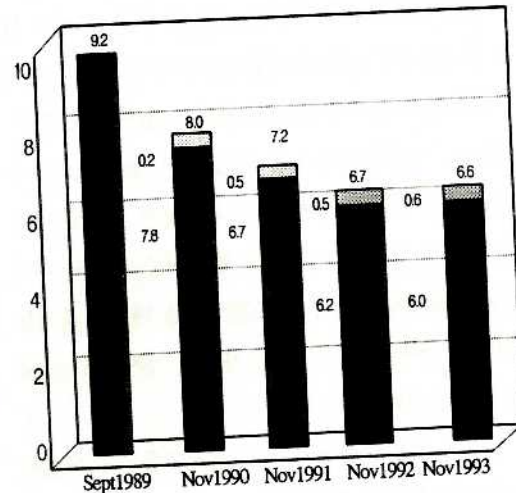
먼저 구동독 지역의 인구 구조는 아래와 같다. 1993년 현재 전 독일인구 8,130만명 가운데 약 19%를 차지하는 약 1,560만이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독 통합 이전부터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1990년과 1991년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압도적으로 통합 이후 구서독지역으로의 이주 붐 때문이었다.

7) 자세한 것은 ebenda 참조

연도	인구수			
	전체	남성	여성	전년대비
1989	16,434	7,873	8,651	-240
1990	16,028	7,873	8,379	-407
1991	15,789	7,557	8,233	-238
1992	15,685	7,544	8,141	-98
1993	15,598	7,527	8,071	-93

<표3> 동독지역의 인구 구조(1989~1993)(단위: 천)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1993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 65

통합을 전후한 동독지역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발전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89년 이후 고용인구가 약 920만에서 1993년 660만(그 중 60만은 서독지역 통근자)으로, 즉 약 320만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그림 1 참조).



■ 동독지역 고용인구 □ 서독지역 통근자
 <그림 1> 1989년 9월 이후 구 동독의 고용구조 (16-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단위: 백만)

(자료: Arbeitsmarkt 1993,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ondernummer, Nürnberg 1994, S.139)

전체의 약 1/3에 달하는 일자리의 대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산업구조상의 급격한 변화 역시 통합과 함께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산업 관련 종사자가 1989년 약 97만에서 1993년 약 24만으로 감소되고, 제조업 관련 업종은 약 340만에서 113만으로, 국가부문 종사자 역시 약 204만에서 136만으로 감소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2 참조). 그리고 구서독의 추세와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무직 종사자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표3 참조).

	1989	1990	1991	1992	1993
농업 / 임업/수산업	975	781	454	293	242
에너지 / 광업	350	337	233	176	142
제조업	3408	2979	2049	1330	1135
건축업	628	628	678	776	869
상업	850	775	702	674	681
기타 서비스업종	1496	1433	1674	1752	1809
국가부문(사회보험등)	2040	1887	1489	1445	1364
총액	9747	8820	7279	6446	6242

<표2> 1989년 이후 동독지역 업종별 종사자 (단위: 천)
 (자료: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rsg.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Vierteljahresschrift, August 1994, S.10-16)

	insgesamt	Frauen	Männer
	- in 1000		
Arbeiter	2489	489	2001
Angestellte	3164	2001	1163
Beamte	102	34	68
Selbständige/Freischaffende	366	111	254
Genossenschaftsmitglieder	62	24	38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29	20	9
Sinstige/ohne Angabe	388	156	228

<표3> 동독지역의 직업별 경제활동인구(추정치, 1993년 11월)

(자료: Arbeitsmarkt Monitor für die neuen Bundesländern, Bundesanstalt für Arbeit, Umfrage 11/93, Tabelle 7005)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의 도입은 동시에 노동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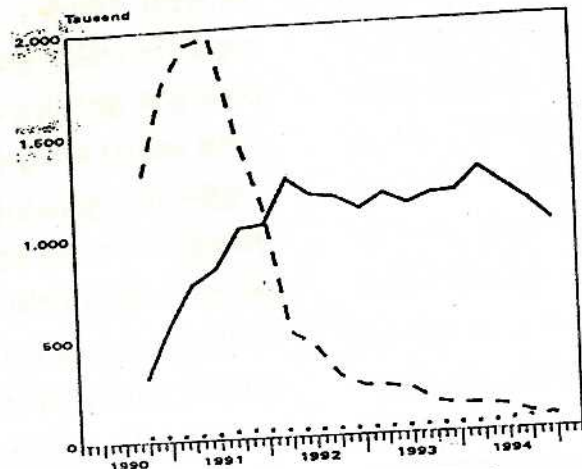
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동강도 강화가 그 두드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양독 통합 이후 당신의 작업이 그 이전과 비교해 다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실업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66%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다시 말해 불완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28%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노동강도의 비교(1994) (경제활동 인구만 대상으로 함)			
	강화됐다	마찬가지다	약화됐다	무응답/비해답
전체	63	25	6	6
취업상태	66	25	5	3
노동시장 정책적 조치에 의존	28	26	15	31

<표4> 통합 이후 노동강도 비교
 (자료: stz/leben '94에 의거 재작성)

노동강도의 강화와 함께 통합 이후 동독지역 주민에게 등장한 최대의 문제는 단연 실업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독일 인구의 19.2%를 차지하는 동독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 독일 총실업자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94년 현재). 그리고 구동독에서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업문제는 전적으로 통합 이후에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갖는 그 심각성은 실업상태가



... 빈 일자리 — 실업자 — 임시직
 <그림> 구동독의 실업자, 일자리 그리고 임시직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실업자	'노동창출 조치' 해당자	재교육 및 이직교육 대상자	임시직	구서독지역 통근자 (Pendler)	조기퇴직 및 노후보조금 생활자	일자리 결손	
						절대수	백분율
1,136,126	239,895	233,148	87,145	424,800	630,225	2811,339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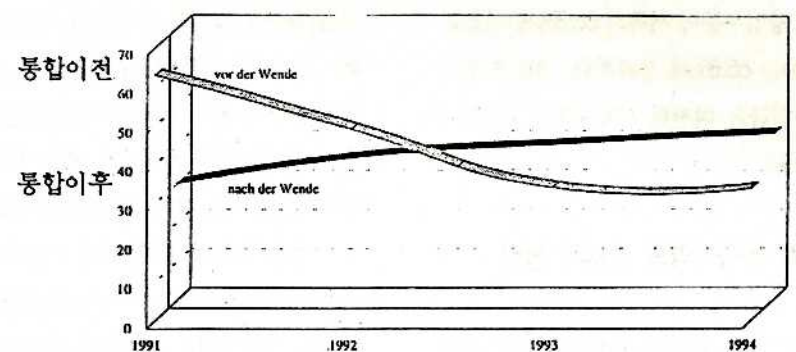
<표5> 동독지역의 불완전 고용 실태
 (자료: IABwerkstattbericht Nr. 1.8/15.8.1994에 의거 재작성)

공식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문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정책수단인, 한시적인 '노동창출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BM)' 해당자, 재교육 및 이직교육 과정에 있는 자, 조기 퇴직자(Vorruhestand) 및 노후 보조금(Alterübergangsgeld) 대상자 그리고 임시직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자를 모두 포괄할 때, 그 현실을 올바르게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재교육 및 이직교육 과정에 있는 자라도 자신의 취업 기회가 이를 통해 개선되리라도 기대하는 자는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른바 '말 없는 산업예비군(stille Reserve)', 즉 실업 상태에 있지만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집단과 단순히 '가사노동'으로 복귀한 여성을 감안하지 않음

면 안된다.8) 이렇게 볼 때 1994년 6월 현재 동독지역의 고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약 28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이는 필요한 일자리의 31.9%에 해당된다 (표5 참조).

특히 동독지역의 실업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실업자와 여성 장기실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1993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구서독의 경우 전체 실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4.5%이고 그 가운데 1년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가 27.3%이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경우 전체 실업자 가운데 65.4%가 여성이고 그 가운데 1년 이상 실업자가 전체의 74.4%에 달하고 있다. 구동독의 취업 구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서독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남녀가

8) Sozialreport(1994), S. 118 이하 참조.



<그림3> 당신은 구동독에서의 실업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업은(의) 잘못된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결과이다. (자료: szf/leben '94)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동독의 가계였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용 위기의 최대의 피해자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점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2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수가 1993년 말 총 35만6천명인데 이는 동기간 전년 대비 약 27만명에서 30% 증가한 수치이다. 그 결과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24.2%에서 1993년 30.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9)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독지역에서 실업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실업의 주요 원인이 구동독의 사회·경제정책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991년 63%에서 1994년 33%로 급격히 감소하고, 반면에 실업의 원인이 통합 이후의 사회·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응답한 사람이 동기간 32%에서 52%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조급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 실업의 결정적인 혹은 적어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92%에 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독지역에서의 실업 원인이 구동독 계획경제의 오류 때문이라고 보는 구서독 정치권의 일반적 견해가 해당 지역에서는 전

9) Ebenda, S. 127.

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 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소득 구조

구동독 주민이 통합에 동의했던 최대 명분은 무엇보다 '서독 수준의 생활'이었다. 아래 <표6>이 보여 주는 것처럼 통합 이후 개인소득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합 직후인 1991년과 1992년 노동자와 사무직종의 개인소득은 각각 48.1%, 50.4% 증가하였지만 그 경향은 다시 1993년과 1994년에 이르러 각각 9%, 3.2%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표6>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업종별 소득지위의 분화 경향과 함께 소득 구조의 불균등, 즉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역시 뚜렷한 추세로 확인되고 있다. <표7>에서 보듯이 1990년 평균소득을 100으로 할 때 그 이하와 이상이 각각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반면에 1993년에는 57%, 1994년에는 58%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권 최저생계의 경계에 머무는 소득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1994년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독지역 주민의 월 총액소득이 서독의 그것에 접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자간의 격차는 크다. 1994년 3/4분기 평균소득을 보자(표8 참조). 우선

업종별로 볼 때 광업부문이 서독의 86.3%에 이르고, 반면 제조업분야는 65.8%에 불과하다. 그리고 동독 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여전히 서독지역의 71.9%에 불과한 실정이다.

4) 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산업과 생산

알려진 것처럼 양독 통합은 생각할 수 있는 최단

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 7월 1일 '통화·경제 및 사회통합'이 되고 난 다음인 1991년 말에 들어와 동독지역에서의 산업생산은 1989년 수준 대비 약 1/3이 폭락하게 된다. 1990년과 1991년 사이에만도 제조업에서의 생산은 20.5%, 철강·제철·기계·자동차 등 투자재 부문에서 그것은 32% 감소하였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17.3%, 1991년에는 34.8%가 감소한다. 같은 기간

	1990		1991		1992		1993		1994	
	Mark	DM	Zu- wachs %	DM	Zu- wachs %	DM	Zu- wachs %	DM	Zu- wachs %	
Mittelwert	786	1042	32.5	1371	31.5	1529	11.5	1633	6.8	
Arbeiter/ Angestellte	804	1191	48.1	1792	50.4	1954	9	2016	3.2	
Landwirtschaft	744	1029	38.3	1292	25.6	1672	29.4	1309	-21.3	
Selbständige	1150	1293	12.4	2368	83.1	2463	4	2577	4.6	
Ausbildung/ Umschüler	-	575	-	1010	75.7	1050	4	973	-7.3	
Anzahl der Begragten	1528	1466	-	1516	-	1548	-	1503	-	
Anzahl der Antworten	1298	1300	-	1148	-	1328	-	1268	-	

<표6> 동독지역주민의 개인소득 (자료: sfz/leben'90, '91, '92, '93, '94)

Durchschnittsein- kommen = 100	Anteil der Einkommensbezieher in Prozent				
	1990	1991	1992	1993	1994
unter 50%	8	8	11	5	14
50% bis 100%	42	49	38	53	44
100% bis 150%	40	34	36	32	30
150% bis 200%	9	7	9	7	9
über 200%	1	2	6	4	4
	100	100	100	100	100

<표7> 동독지역에서의 상대적 소득분배(1990-1994) (전 소득종류) (자료: sfz/leben'90, '91, '92, '93, '94)

기간 내에 구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세계경제

경제분야	월총소득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서대비(%)
농업 및 임업	2269	3,156	71.9
광업	4,241	4,914	86.3
에너지	3,797	4,874	77.9
제조업	3,026	4,596	65.8
건축	3,352	4,148	80.8
상업	2,941	3,770	78.0
운수	3,089	4,144	74.5
서비스	2,446	3,346	73.1
공공부문	3,016	4,275	70.6
평균	2,913	4,052	71.9

<표8> 1994년 3/4분기 월 평균소득 (자료: DIW-Wochenbericht 4/95)

중 폴란드 9%, 체코 16%, 루마니아 14% 등 여타 동

구권 국가와 비교해서도 유례가 없는 '탈산업화경향(Deindustrialisierungstendenz)'이 나타난 것이다. 1992년 4월 현재, 199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제조업분야 전체의 순생산량은 62.1%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기계 제작은 29.0%, 정밀기계 등은 18.2% 사무기기, 컴퓨터는 26.5%, 의류는 34.7%에 이르러 거의 파멸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표9 참조).

제조업종 전체	62.1
1. 기초 소재 및 생산재 부문 그 중	80.8
석유화학	132.0
골재 채취	90.5
재철산업	60.1
제련	49.5
화학산업	73.9
2. 투자재 업종	46.1
철강, 경금속 및 개선차량 제작	129.5
기계제작	29.0
자동차, 차량 정비	49.7
전자, 가전제품수리	42.8
정밀기계, 렌즈, 시계	18.2
사무기계, 컴퓨터	26.5
3. 소비재 업종	73.5
목재가구	78.8
인쇄, 출판	138.1
의류	34.7
식품, 영양	92.1

<표9> 동독지역 제조업종 국내 순생산량 지표 (1992년 4월: 1990 하반기 = 1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ie Wirtschaft)

이러한 대대적 '탈산업화'는 물론 독일정부의 특

	1992		1993		1994	
	3/4분기	4/4	1/4	2/4	3/4	4/4
	63.3	70.0	62.5	67.7	72.7	77.8
건축부문	144.4	135.0	113.2	148.2	158.8	160.2
					146.1	185.9
					200.1	231.5**

<표10> 동독지역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변화 추이 (1992하반기 - 1994: 1990하반기 = 100) * 순생산량기준 ** 10월-12월 평균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1st quarter 1995,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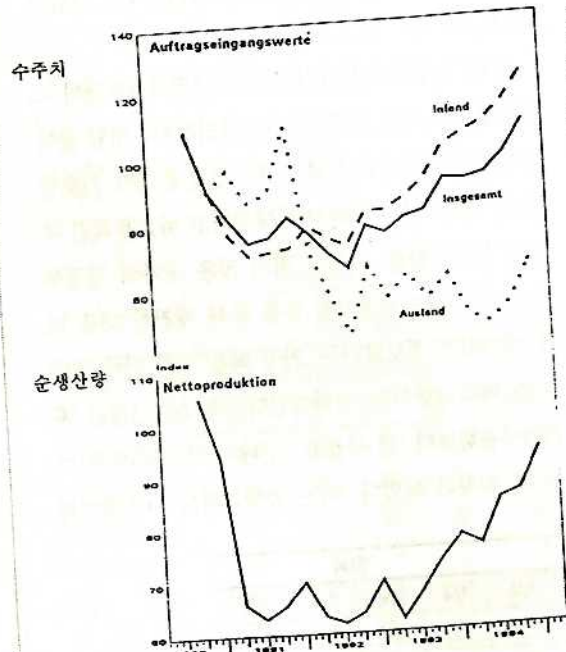
정한 이행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중심으로서 <신탁관리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0) 이 신탁관리청은 1990년 통화 및 경제통합 이전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인수해서 구성된 일종의 국영지주회사라 할 수 있다. 양독 통합 이후 <신탁관리청>은 당시 독일의 정치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독교사회연합(CSU)>의 당수가 장관으로 있던 연방재무성 아래 편입된다. 그리고 현재는 자신의 과업을, 독일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자면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1994년 말을 기해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전혀 '시장경제적이지' 않은 이 '중앙관리경제적' 심급인 <신탁관리청>의 동독 경제체제 재편 전략의 핵심은 당시 총재인 로베더(Rohwedder)가 언급한 것처럼 "최상의 재건(Sanierung)은 사유화(Privatisierung)"라는 개념이었다.

처음 구성 당시 약 12,000개의 공장과 4백만의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신탁관리청>의 제일 운영 원칙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기초한 '속도'였다. 다시 말해 비현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구동독 산업시설을, 사실상 적지 않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의미하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재건한 다음 이를 매각하는 경로보다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이를 매각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즉 선(先)재건 후(後)사유화보다 '선 사유화 - 구매자 책임 하에 후 재건'이 원칙이 되었다. 이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전략

10) <신탁관리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Seibel (1994), S.3-39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는 Wesenithal (1994)을 참조.

에서 예컨대 종업원이나 공공재단의 지주회사나 임대방식보다는, 일단 구매자가 나서면 "가격이 어떠하든(um jeden Preis)"¹¹⁾ 개별계약을 통해 매각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된 기업은 조업 중단을 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도, 경쟁성 그리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사유화전략은 다른 현존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기간을 결정적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일정한 경쟁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몇몇 기업과 업종이 갑자기 세계시장에 노출됨으로써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또 사상 유례 없는 생산량 감소와 고용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림4> 동독지역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주치와 국내 순생산량 (1990년 하반기 = 1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아무튼 괴멸적 타격을 입은 동독의 지역경제는 적어도 수치상 1993년 2/4분기에 이르러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그림4 참조). 특히 제조업 분야를 본다고 할 때 통화·경제통합이 이루어진 1990년 하반기를 100이라고 할 때, 1992년 4/4분기는 70.0%, 1993년 4/4분기는 77.8%, 그리고 1994년 4/4분기는 95.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주기상의 회복 조짐에 근거하여 마침내 동독 지역 경제가 과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의 일상을 회복하여 제2의 경제 기적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성장율이 곧바로 현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동독지역 경제의 경기회복은 <그림4>의 수주량에서 보는 것처럼 수출보다는 내수팽창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수 팽창은 압도적으로 건축 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은 것이다(표10 참조). 이는 정부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통한 서독자본에 대한 투자유인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무실, 상업 중심지 그리고 주택 개량 등 건축붐을 통한 경기회복은 기본적으로 서독으로부터의 자금 이전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축업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¹²⁾

둘째, 구서독과 동독간의 생산성 격차를 들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한 동독지역 주민의 1인당 생산성은 1991년 31.8%에서 1992년 38.5% 그리고 1993년 45.5%로 절반미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¹³⁾. 그리고 전독일의 국민총생산량에서 동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합 당시의 7.6%에서 1포인트

12) 여기에 대해서는 Blöchl/Eth (1992), S.9 참조
13) Sozialreport (1994), S. 152.

트 높아진 8.6%에 불과하다¹⁴⁾. 여전히 현격한 양지역간의 생산성 격차가 없어지기까지는 빨라야 10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¹⁵⁾

셋째,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수출집약적 투자재산업이 전체 공산품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독지역이 46%인데 반해, 동독지역은 약 40%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 시장에서 생필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독지역이 약 12%에 불과한 데 반해 동독지역에서 그것은 20%에 달하고 있다.¹⁶⁾

넷째, 고용구조적인 측면에서 동독지역의 경우 제조업분야 종사자의 수가 1994년 97만 7천명이고 건축분야 종사자수가 99만 3천명인데 반해, 서독지역은 양 분야의 비율이 4:1이다.¹⁷⁾

다섯째, 1994년 전독일의 수출량에서 동독지역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리고 1991년에서 1994년 말에 이르기까지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 이전된 교역량은 9,320억 DM인데 비해, 그 역은 1,450억 DM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불 이전은 다시 서독산 상품에 대한 수요로 역류된다.¹⁸⁾ 결국 동독지역의 실질적 수요는 동독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아니라 대다수 서독지역 생산품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 조건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경기 회복은 동독지역의 자생적 기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독의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사유화정책의 결과 현재 <신탁관리청> 소유 산업체의 약 90%가 서독측 투자자의 소유가 되었다. 1994년 약 400억DM에 달했던 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이 삭감되고, 다시 불황이 닥칠 경우 이 상황, 즉 지점경제(Filialwirtschaft)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불확실하다.¹⁹⁾

14)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1995), S.629.

마지막으로 동독지역의 순수 지방기업의 경우 채무 대 자산의 비율이 서독지역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높다. 현재의 무이자 대부 기간이 끝날 시점에 가면 대다수 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²⁰⁾

4. 동독지역 주민의 정치적 이해 대변 문제

구동독의 시장경제로의 통합과정은 구동독 지역 이해의 왜곡되고 불충분한 반영 과정이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제도, 조직, 인물의 세가지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볼 때 구서독의 압도적 헤게모니 하에 일방적 제도이식을 통해 진행된 통합과정에서 구서독의 "대변 원칙, 결정 규칙 그리고 '상부구조' 상의 전체구조는 변경되어서는 안된다"²²⁾는 것은 무언의 기본 합의사항이었다. 그 결과 구동독 주민의 이해는 주변적인 것이 되고 또 이들은 일종의 "구조적 소수"로 남게 된다. 둘째,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이해대변 기구는 마찬가지로 구서독 정당 및 사회단체의 지부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당 및 사회단체를 통해 구동독의 특수한 이해와 지향을 구서독에 대해 균형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물론 단일 지역정당으로 최대인 구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존재하면서 항의의 사회적 양은 표현하였지만 문제의 정치적 해결

15) Kowalski (1995), S.753.
16) Kowalski (1995), S. 754.
17) Ebenda.
18) Ebenda.
19) Ebenda.
20) Ebenda.

21) 이하의 논의는 Wesenthal (1993) 참조
22) Abromeit (1993), S.283.

11) Seibel(1994), S.12.

파트너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²³⁾ 셋째, 리더십 차원에서 구동독에서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체코의 <77헌장그룹>에 비견될 반체제 개혁그룹이 부재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정치적 구심 기능을 수행할 인물이나 조직이 형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통합과정을 주도한 정치 행위자는 대부분 서독으로부터 충원되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민주주의 경험을 감안할 때,²⁴⁾ 이러한 구동독의 '재(再)민주화' 경로는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유사한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구 동구권국가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²⁵⁾

첫째,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지그재그 속에서 구동독을 제외한 여타 동구권 국가에서 이전의 국가당이나 '좌파' 정당들이 현재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경쟁력을 복원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지역의 '좌파' 정당은 전국적 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 특히 동독지역 최대의 지역정당인 <민주사회당>은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등 여타 '좌파' 정당과 연합할 경우엔 때에 따라서 우파에 대해 다수를 이루지만 이들 '좌파' 정당이 동일한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둘째, 동구권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준거점으로 등장한 이른바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적' 제도로서 각종 사회단체 내지 이익단체들을 보자. 여타 동구권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과정상의 '교란요소'로 치부되고 정치영역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구동독에 이식된 '발전된' 서독의 노조조직과 사용자단체 등 시민사회

23) <민주사회당>은 일단 당원 수에 있어 동독지역에서 최대의 정당이다. 1993년 현재 주요 정당의 동독지역 당원 수를 볼 때 기민당이 87만 4천, 사회민주당이 28만 5천, 자유민주당이 33만 8천(동베를린 제외), 민주사회당이 130만, 동맹90/녹색당이 3만 천, 극우 공화주의자들이 3만 4천이다 (Sozialreport 1994, 321쪽).

적 요소들은 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른바 국가기업-노조라는 삼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여타 동구권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고용주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구동독과 비교해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인 사회적·정치적 비용을 낮추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과 노조간의 자율적 단체협상의 공간이 지극히 협소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구동독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신탁관리청>을 통해 국유부문이 전격적으로 사유화됨으로써 역사상 전대미문의 '탈산업화'와 고용 위기를 초래하였다. 국가의 개입 공간을 상대적으로 좁히면서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 여지를 상대적으로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노조의 경우 구동독의 <자유독일노총(FDGB)>이 해체되고 구서독의 <독일노총(DGB)> 아래로 편입됨으로써 기존의 단일노조와 산별노조 원칙이 관철되었다. 이는 노동자조직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독일 통일 5년의 대차대조와 관련한 몇가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일통합은 여타 동구권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국가가 완전 해소되면서 다른 국가에 통

24)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해 볼때, 현재의 동독 상황은 '보수혁명' 즉 파시즘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 이상 구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삶의 전망 상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우세력의 사회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reiffenhagen (1994), S.395ff.
25) 마찬가지로 Wesenthal (1993)을 참조.

합된, 즉 '국가통합'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례이다. 통합과정의 핵심은 일방적인 '제도 이식'에 있다.

둘째, 구동독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관료주의적-국가주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을 갖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것의 진행 과정은 대단히 '식민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월했던 노동자의 개별적 권리를 비롯한 구동독의 사회정책상의 몇가지 제도들은 전적으로 무시되었고 또 이를 관철할 만한 정치세력도 부재하였다.

셋째, 통합과정에서 초래된 동독지역 경제의 대공황적 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필연적 경과단계였다기 보다, 급진적 체제 교체가 야기한 정치·정책적 오류의 결과였다.

넷째, 체제 교체가 잠정적으로 완료된 현시점에서 동독지역의 산업 생산력은 통합 당시 시점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동독지역의 생활 수준 역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경제활동 인구의 약 1/3이 실업자가 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였다.

다섯째, 통합 협상과 이후의 과정에서 구동독주민 이해의 정치적 대변은 불충분하였고 그나마 이것 역시도 '서독사람들(Wessis)'에 의해 독점되었다.

여섯째, 결국 통합 5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정치와 경제에서의 '체계통합(Systemintegration)'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Sozialintegration)'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다.²⁶⁾ 그런 한에 있어서 동독문제 즉 지역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문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Abromeit, H.

26) '체계통합'과 '사회통합' 개념에 대해서는 Lockwood (1964)을 참조.

1993 Die 'Vertretungslücke'. Probleme im neuen deutschen Bundesstaat, in: Gegenwartskunde, 42 Heft 3.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1995 Memorandum '95. Stärkung des Sozialstaates - Wirtschaftspolitik für Arbeit und ökologischen Umbau,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5/95.
Bäcker, Gerhard/ Johannes Steffen,
1990 Dokumentationen. Synopse zu ausgewählten Bereichen des Arbeits- und Sozialversicherungsrechts i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WSI Mitteilung 5/1990.
Bialas, Christiane/Wilfried Ettl
1992 Wirtschaftliche Lage und soziale Differenzierung im Transformationsprozess, August Max-Planck-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en e.V., Arbeitsgruppe Transformationsprozes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 der Humboldt-Universität z Berlin.
Brie, Michael
1994 Die Ostdeutschen auf dem Weg vom "armen Bruder" zur organisierten Minderheit?, Max-Planck-Gesellschaft, Mai 1994.
Christian, Peter/Neubauer, Ralf
1991 Kolonie im eigenen Land. Die Treuhand, Bonn und die Wirtschaftskatastrophe der fünf neuen Bundesländer, Berlin.
Greiffenhagen, Martin und Sylvia
1994 Konservative Revolution - wieder aktuell? i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6/1994.
Kowalski, Reinhold
1995 Wirtschaftsinformation. Wie robust ist der Aufschwung Ost?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6/1995.
Kurz-Scherf, Ingrid/ Gunter Winkler
1994 Sozialreport 1994. Daten und Fakten zur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Sozialreport로 인용).
Lockwood, Davi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Gorge K. Zoltschan/Hirsch, Walter (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Boston:Houghton Mifflin.
Schmittner, Horst/Marfried H. Böbke,
1990 Das Recht auf Arbeit in einer gesamtdeutschen Verfassung, i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10/90.
Seibel, Wolfgang
1994 Strategische Fehler oder erfolgreiches Scheitern? Zur Entwicklungsgeschichte der Treuhandanstalt 1990-1993,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5.Jg. (1994), Heft 1.
Wesenthal, Helmut
1993 Blockaden, Asymmetrien, Perfektionsmängel: Ein Vergleich der Repräsentationschancen sozialer Interessen im Transformationsprozess, Max-Planck-Gesellschaft, Berlin.
1994 East Germany as a Unique Case of Societal Transformation: Main Characteristics and Emergent Misperceptions, Max-Planck-Gesellschaft, Berlin.

통일과제와 민족문제 변혁과 통일에서 "민족"이 설 땅은 어디인가?

유 초 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

사회변혁과 민족문제의 일반론

≡ 계급과 민족

민족은 계급에 비추어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민족은 복수의 사회계급을 포함하며, 그런 점에서 계급은 민족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확산과 자본주의 지양의 노력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민족간의 차이를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 민족이 사회단위로서 지닌 자격

민족은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존재양태가 된다. 다시말해 시민사회는 대내적으로 국가를 구성하여 상호적 삶을 꾸리고, 대외적으로 민족을 이루어 자주성을 지닌다. 즉 시민사회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사회적 조직형태에 대해 독립변수적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성원으로서 구체적 실체가 되는 셈이다.

사회구성을 담아내는 틀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다. 민족은 사회구성을 현실태로 풀갓추는 매개이다. 사회구성체의 존재형태가 민족일 때 국가는 민족의 정치적 현상태이다.

≡ 민족의 성립과 특징

민족은 ① 봉건적 생산양식을 뚫고 생산수단을 집중소유한 부르조아가 ② 중세적 지방경제를 통합한 국민경제단위를 이루고 ③ 분권적 봉건체제를 해체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정치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형성되었다. 그런만큼 민족은 자연적 인간집단이 아니라 '만들어낸' 사회조직이다. 부르조아의 민족형성은 당시적 맥락에서 내부의 봉건세력과 외부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을 내세우는 보편적 사회집단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민족이 지니는 일반적 특징으로는 ① 안정·지속적 공동체, ② 공동의 언어, ③ 경계획정된 영토 ④ 응집력있는 경제圈, ⑤ 집단적 공통특성(기질·습관·

행태) 등이 거론된다.(Stalin) 결국, 언어와 기질을 공유한 인간집단을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적 상호관계를 이루도록 하여 국제시장과 국제역관계에 대응하려는 부르조아의 경제정치적 의지가 산출한 것이 민족인 셈이다.

≡ 馬-恩 민족론의 핵심과 근거

맑스-엔겔스가 민족을 낮게 평가한 데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이유가 있다.

민족(Nation)은 민족성종족 또는 민족체(Nationalität)들을 거느리는데, 후자는 합쳐서 민족을 형성한 모집단이면서 더 원천적으로는 보다 작은 고대 종족 내지 부족(Tribus, Volksstamm)들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고대 종족이 의미있는 사회집단으로 남아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체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며 나아가 민족 또한 부르조아 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민족이란 개인들을 일정한 사회구성체의 요소단위로 묶어두고 부르조아체제의 외피인 국가에 대한 止體性을 갖도록 만든다.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의식적 주체들은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벽을 넘은 세계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馬-恩의 생각으로 보면 민족은 脫자본주의 혁명을 성취할 중심적 주체단위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후진·주변 민족은 자체로 변혁주체계급을 산출할 수 없다. 그런만큼 민족은 변혁세력이라면 소속감을 벗어던져야 할 과거적-임시적 활동공간-잔존형태일 뿐이다. 19세기 중·후반의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중심국가 민족 내부의 계급적 성취 곧 사회주의혁명이었고, 그에 우선하는 시대적 과

업은 없었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국가 내부·외부의 민족봉기-反식민주쟁이 추구하는 해방은 '우선적 과업'의 성취를 통해 결과적·사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馬-恩이 본 '민족'의 변혁론적 한계는 요컨대 코앞에 닥친 혁명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비추어 민족문제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데 있다. 민족해방세력은 선진국의 계급혁명과 연대함으로써만 자신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세계문제에 종속되므로 당사주체들이 노동계급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한 부차적·주변적 요인으로서 일단 방기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적어도 불가피하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마르크스 - 엔겔스 민족론의

자기수정과 그 현재적 의미

≡ 맑스 민족론의 자기반성

맑스는 말년에 이르러 민족에 대한 자신의 낮은 평가를 상당히 수정했다. 자본주의가 원숙하여 계급이 침묵하게 대립되는 시점이나 사회에만 변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 혁명운동의 전위이다."(1882) 그의 이러한 견해변화는 무엇보다 러시아에서의 혁명발발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촉발되었다. 그의 새로운 견해는 후일 제국주의론으로 연결될,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촉진되었다. "영국 사회주의혁명이 아일랜드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해방이 영국혁명을 촉발한다."(1867) 수정된 견해의 이들 두가지 예가 제출된 중간시점에 맑스는 원시축

적과정의 일양성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기도 했다.(1875) 자본주의적 성장·발전에 불균등성과 시간적 차이 및 과정·방법상의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변화의 근거에는 1848년 '민족들의 봄'에 고무된 혁명에의 열정과 '환상'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 서유럽 특히 영·불·독 세 나라에서의 혁명성취를 앞세운 자본중심·현상중심의 관점에 대한 변화가 '새로운 견해'의 요점이다. 식민주의 자본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이 도달함으로써 맑스·엔겔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과 붕괴는 아성인 중심보다 주변에서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전회했다. —또는 새로운 인식을 더했다: "영국의 야만주의가 인도의 공동체적 토지소유를 파괴했으며, 그 결과 토착농민을 진보시키기보다는 후퇴시켰다." "러시아는 공동체적 소유를 기반으로 곧장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민족관 수정의 변혁론적 의미

민족문제에 대해 1860-1870's 이후 맑스가 보인 견해의 변화에는 물론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민족문제 상대적 증시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선진자본중심의 사고에 대한 것일 뿐, 계급문제에의 대치나 사회주의혁명의 유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족해방의 중요성을 과거에 비해 더욱 인정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혁명의 성취를 향한 더욱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은 수정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에 대한 '無역사적 민족'이라는 관점이 바뀐 것은 그 견해변화가 단순한 '예외상의 반성'이 아님을 드러낸다.

이 새로운 견해는 몇가지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① 무엇보다 이는 민족의 변혁론적 지위를 인정

하는 의미를 지닌다. ② 또한 식민지사회에서 외부의 충격과는 무관히 내부혁명이 가능하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서유럽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반성의 꼬투리일 수도 있다. ④ 「공산당선언」에 보이는 전통사회에 대한 폄하, 그리고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나 중국과 인도의 반식민주의 투쟁에 대한 평가 등에 나타난 동양사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절하의 태도가 후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관점이 자본중심에서 인간(反자본적 주체집단)중심으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수정판 민족관의 현재적 함의

맑스의 '반성'이 주는 '시사'는 더듬 나아간 사회역사적 인식을 서로 다른 구체성의 수준에서 준다. (1) 주변부사회의 민족해방은 중심부사회의 계급해방을 위한 전술적 고려의 대상으로서만 보던 안된다. (2) 식민지·후진국의 민족해방·계급투쟁은 제국주의국가·선진국 노동자의 투쟁방향과 같등하지 않는다. (3) 자본주의가 가장 진전된 수준의 경제적 사회구성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4) 경험분석적 실증연구는 다양한 전통사회 내부에 자본주의맹아의 자생가능성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5) 자본주의세력 따라서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에 대한 위협적 요인에서 교훈을 얻어 삶을 연장해왔다. (6) 맑스·엔겔스의 주요테제를 가운데는 역사적·현실적 실천과 인식의 누적을 통해 수정될 것도 있다. (7) 사회역사적 인식의 구체적 내용과 원리는 현실역동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사실을 통해 풍부해진다. (8) 특정한 이론·언어는 현실을 온전히 담는 그릇 더구나 틀이 아니며, 다양한 조명에 절합돼야 한다. ① 민족단위의 해방투쟁은 자체로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으로 하는 중심의 변혁에 기여한다. ② 억압국 노동계급은 피억압국 노동자인민의 해방에 적극연대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가속화한다. ③ 민족화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듯 민족간의 자본주의적 발전도 균등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④ 식민주의 내지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팽창과 착취를 '야만의 문명화'와 '원초적 해방'로 볼 수 없다. ⑤ 임금저하·공황·계급대립격화·자본주의소멸의 진행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필연 '법칙'이 아니다. ⑥ 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를 중시하는 서유럽중심·자본중심의 관점과 동쪽세계 폄하는 반성돼야 한다. ⑦ 유럽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발전과 연관된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은 정당했을 뿐 아니라 세계사적 발전에 조응했다. 계급분석·계급투쟁·폭력혁명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통시대적 절대교조가 아니다. ⑧ 선행 사상·이론에 대해서는 그 합리적 핵심의 보존과 함께 시대적·관점적 한계의 극복이 요구된다.

한국사회변혁과 민족문제

한국사회의 현실과 역사에서 민족의 형성과 존재양태는 유럽의 경우와 같지 않다. 언어·풍습·문화·전통 등 민족의 특질들이 경제적 토대의 분석으로 말끔히 해명되거나 계급론에 뚫아 뚫아낼 수는 없다. 민족의 공동성격이 사회변혁을 향한 동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능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馬·恩·列·斯의 말씀들이 속속들이 금과옥조라고 승인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데가 있다. 한편, 비록 적극적·실증적으로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맑스 자신이 드러내보이는 반성의 한 꼬투리도 진지

하게 음미되어야 한다.

이러한 언명은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 적어도 민족이 계급을 압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자의 지적내용을 현단계 남한 사회변혁운동의 주도권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은 표현이 처한 의미연관의 맥락성을 무시하고, 언어에 담긴 '과잉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논리화하며, 그만큼 언표의 안팎에 함축된 실험적·실천적 의도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맑스의 반성' 내지 '馬·恩의 일반적 민족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 내지 의의는 몇가지 수준으로 표현될 수 있다. ① 무엇보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남북통일은 결코 부차적이거나 주변적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② 다시말해 민족의 화해와 화합 및 통일은 민족의 실질적 내용인 민중의 해방·변혁과 사전·사후를 통틀어 긴밀한 실질연관을 이룬다. ③ 통일은 과정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를 동반하지만 온전한 계급철폐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은 적어도 분단상태에서는 상정할 수 없다. 그만큼 통일된 공동체는 분단된 사회보다 향후의 발전에서 월등한 조건을 형성한다. ④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통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에 비해 우선적 가치를 지닌다. ⑤ 통일이 수단적·방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내재가치·자체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변혁지향세력이 상당한 다수파를 이루며 존재한다. ⑥ 북한의 주민이나 권력 모두 적어도 남한의 근본주의세력에 비해 민족의 가치를 긍정하는 경향이 훨씬 짙다. ⑦ 계급혁명의 당위적 주체들의 현재적 의식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현재적 선도주체들의 생활문화상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전술·후술 참조)

역사기술로 본 북한의 민족인식

북한의 역사서술은 남한의 대응물에 비해 뚜렷이 차이가 나는 몇가지 일관된 논점들을 포함한다. 서술된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논하기 전에 그 서술의 관점과 방식에서부터 매우 특이한 데가 있다. 공식 기관에서 펴낸 국사는 '춘추필법의 대중적·현대적 변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역사적 '사실'의 '記述'이 라기보다는 역사적 '교훈'의 '示達'이다. 서술대상 인물과 사건에마다 정치적 의미부여·가치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아니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예컨대 민족의 지위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79년에 시작해 1983년에 완성한 『조선전사』 33권의 맨 첫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력사는 인류문명의 여명기에 그 뿌리를 내린 유구한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며 우리 나라는 유구한 력사의 나라이다." 여기서의 '인민'은 물론 '민족'이 아니다. 현대가 시작되는 1926년부터 『조선전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일성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와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표현된다. 하나, 『전사』적 '표현'으로서의 주장이 사실로 수긍되기에는 근거가 박약하다.

'인민'을 주체로 상징하는 역사기술의 관점은 물론 '주체사상'에 입각해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관점에서 '인민'의 지위는 '사람'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자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주체이고, '인민'(주로 '인민대중')은 사람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이며, '노동자'는 근로인민대중에서 산출되어 인민대중의 활동을 주도하는 선진계급이다.

주체사상의 공동체는 다섯 층으로 구성된다: 사람-인민대중-노동계급-당일꾼-수령. 여기서 수령은 사람의 '뇌수'이고 당은 '중추' 또는 '심장'이며, 인민은 '몸통' 또는 '팔다리'이다. 여기서 노동계급은 사람의 '신경'에 해당되며, '사람'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공화국성원' 전체 내지 '인류'를 의미할 수 있다.

'주체사상' 내지 『조선전사』의 '인민'은 표현상 '민족'이 아니며 의미상 '노동자'가 아니다. 여기서의 '인민'은 물론 '국민'도 '종족'도 '시민'도 아니다. '민족'의 내부요소로서의 '민족체'도 아니며, '민족'의 경계에 갇히지 '인류'나 '사회적 인간'도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적 의미의 인민이 지니는 변혁론적 지위는 어디쯤인가? 우선, 그것은 근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변혁주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없다. 고조선에서 20세기 막바지에 이르는 '조선역사'의 불변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 '인민'은 민족 이전의 인간집단, 곧 근대 이전 사회의 성원이다. 그러나 『조선전사』와 '주체사상'에서의 인민은 이렇듯 허술한 인간집단이 아니다. 사회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 인민은 '인민 일반'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주민'에 가깝다.) 요컨대 '인민'은 '조선역사'의 각 시대에서 사람의 자주성과 이익을 지켜내는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한 인간들의 총체이다.

통시대적 주체로서의 '인민'을 근대적 정치투쟁의 주체나 현대적 '민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과 『전사』에서는 대체로, 한국적 근대 이후의 역사적 주체들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으로 표현하고, 중세 이전의 역사주체들에 대해서는 '인민' 또는 농민·상공인·천민 등의 계층으로 표현함으로써 함으로써 '인민'을 양자를 구분하는 듯하다.

그러나 비록 '대중'이 빠진 형태이긴 하지만 '인민'을 이렇듯 근대 이전에 묶어두는 것은 북한의 공식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서술에 담긴 나의 논지는 북한의 '인민'은 '민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이 논점을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한국적 근대화를 일군 삼대 운동에 대한 『조선전사』의 평가에서 드러난다.

동학은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 발전에 해독적 후과를 미치게 되는 환상적인 종교미신적 형태를 띠고 나온 것이었다." "참으로 갑오농민전쟁은 큰 규모의 구국투쟁이었으며 전례없이 강렬한 대중적인 계급투쟁이었다." 그러한 농민전쟁이 실패한 것은 "전략전술상의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과 "선진계급의 영도를 받지 못한 농민 자신의 대중투쟁이로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개화사상은 "반봉건과 반침략의 결합이라는 주관적 의도·의지는 당시 정세의 올바른 반영이었다." 하지만 "외세의 이용의 전술적 타산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점과 "반외세 폭력의 결집에서, 특히 농민군과의 연합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파탄에 직면했다.

위정척사론은 "보수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이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침략의 위협성으로부터 당시 사람들을 각성시켰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고, 봉건통치층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항일의병운동은 "선진계급에 의한 통일적 지도가 없었다"는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에 있었다." "그리하여 반일의병투쟁은 이 애국적 힘을 옮겨 지도하여 조직동원한다면 어떠한 간악한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

만 아니라 의병투쟁은 부르조아민족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서로 융합되지 못한 조류로서 흘러내려온 위정척사운동과 부르조아적 개혁운동이 서로 결합되려는 매듭을 지어놓음으로써 민족운동의 통일적 발전에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놓았다."

『조선전사』가 동학농민전쟁이나 개화운동에 비해 의병운동에 많은 쪽수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선전사』에서 상술한 논지와 조용하는 측면은 여러가지로 찾아진다. '우리' 인민(대중)의 열렬한 '애국'정신은 "고조선시대에서부터 연면히 계승되어왔다." 이렇듯 '애국'정신과 '국가'의 역사적 비중 또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곧 '국가' 또한 '인민'이나 마찬가지로 통시대적 자기동일성을 지닌다는 것을 함축한다. 또는 그 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민과 국가의 위대성은 곧바로 그 인민을 영도해왔고 그 국가를 건설해왔으며 현대사의 주인공 공으로 활약해온 '주체사상의 창시자'의 지위를 우뚝 솟게 하는 일이 된다.

『조선전사』 33권 중 근대는 3권(13-15)이고, 현대사는 18권이다. 근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두가지다. "우리나라 반일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심"이 그 하나요, "지난날 공산주의운동과 빈일민족해방투쟁에서의 모든 쓰라린 실패와 희생이 그 어느 하나도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종파주의"의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한 초기 공산주의운동이다.

한국의 현실과 민족의 장래

≡ 김영삼적 세계화의 의미

정부의 구호로서의 세계화는 안으로는 재벌을 대변·대행하는 기능을, 밖으로는 미국 금권권력의 압력과 지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행태를 반영한다.

“김영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는 현정권의 문제들을 숨기는 덮가리개이다. 저들은 ‘군부독재의 종식’ ‘경제규모 세계 13위’ ‘우등국가로의 부상’ 등을 외치면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물질적 향유가 넘치며 지구촌 곳곳에 진출하여 뿜내는 나라가 되었(또는 곧 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구호는 실상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5·6공적 구호를 계승한 것이다. 구호의 이러한 계승은 현정권의 성격을 압축하여 드러낸다.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은 북한문제와 안보문제로 으르고 재벌과 정부를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정치지도력’으로 아울러 열어서 우루과아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체제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對한국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고, 나아가 세계적 패권을 과시하고 효율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남한자본은 그러한 세계화에 편승하여 꼬마 제국주의세력으로 발돋움하고자 열 올리고 있다.

≡ 세계화논리를 꺾는 축창, 민족논리

자본·정권·외세의 세계화논리를 꺾는 창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의 것이다. 그러나 그 창자루는 민족대중의 손목에 고무 맞는 크기 또는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체제로 통합된 우루과아라운드에서의 농산물개방규정은 일차적으로 우리 농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우리 농촌을 폐허로 만들자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체질과 생리를 바꾸어놓

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역사적·현실적 생활문화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화를 해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의 “‘우리’를 없앤다”는 것은 물론 아메리카식 삶의 방식·체제로 강제편입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어서 하는가? “‘계급’이 그것이다”라는 단순명쾌한 명제가 여기서 온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다음항 참조)

세계화의 반짝이는 장식은 결국 노동을 묶고 옥죄는 도구이다. 노동자를 목조르는 것은 곧 국민대중을 못살게 구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대다수 민족성원을 죽이는 일이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것’과 ‘우리’를 없애고자 하는 도전에 대한 응전을 ‘노동자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아닌 민족성원은 지지·지원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책임방기이고 간접적 살인이며 자살행위와도 다를 것이 없다.

기득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려는 세계화의 두꺼운 방패와 성벽을 꿰뚫고 깨뜨리는 창과 대포는 노동자가 주인이되 그것들을 잡고 쓰는 손은 민족성원 모두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계급연합 민족성원들이 국내의 금권·정권을 겨누어 꼬나잡는 축창은 성능상 빈약하지만 지배불력의 물리력과 얽혀있는 이 데올로기에 맞서는 힘을 수량·영역·수준에서 두루 강화하는 데 의미있는 무기가 된다.

≡ 민족의 실질내용, 그 역사성과 현실성

민족은 고정된 집단이 물론 아니다. 혈통과 언어

와 지역의 공유가 민족을 형성하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선형적 개념이 지시하는 불변적 실체로서가 아닌 ‘오늘의 민족’은 엄연히 존재한다. 현재의 민족은 생활상 공간적 공동성을 지닐 뿐 아니라 시간을 통한 역사적 생성물이기도 하다. 현실점에 실행태로 드러나고 잠재태로 녹아있는 현실적·역사적 민족성 곧 민족체(Nationalität)의 총체가 곧 민족의 내용이다. 민족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존재양태에 대한 탐구는 변혁의 방향과 수준과 방식을 설정하는 데 유효하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의 의미와

민족통일운동의 원천적 의미

통일은 ‘하나됨’이다. 좁게 볼 때 통일은 둘 또는 셋 이상이 하나로 합치는 동사적 현상이며, 짧게 볼 때 통일은 그러한 합침의 순간적 양태 내지 정지된 상태이다. 넓게 볼 때 통일은 하나로 되는 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통일은 하나로 되어가는 모든 과정과 실천을 의미한다. 길게 볼 때 통일은 하나로 된 순간 완성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하나가 된 이후 그 하나됨을 지키고 넓혀나가며 깊이를 더해가는 모든 실천과 과정을 아울러 의미한다. 길고 넓게 본 통일은 운동이다. 곧 통일은 통일운동이다. 아니다. 통일운동이 곧 통일이다.

철학적 의미해석을 떠나 구체적 현실관계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성원의 삶의 마당을 바꾸어내는 일이며, 민족의 실질적 내용인 노동자·민중의 삶의 마당을 새롭게 확보해내는 일이다. 민족성원과 영토가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의 삶에 비해 분단된 조건

에서의 삶은 장애된 삶, 불구의 삶이다. 지체를 잃은 삶이 결함을 지니듯 분단의 삶은 빼앗긴 삶이다. 부당히 빼앗긴 삶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으로서의 통일운동은 당연하다. 통일이나 통일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이 혈통·언어·영토·신화·풍습을 공유하는 인민의 재결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의미지워지거나, 변혁과는 무관히 그 자체로 至上的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구될 때이다.

민족성원이 각자 지닌 능력과 지혜를 통합하고 국토가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총괄조직한 삶은 분단된 삶에 비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다. 오래된 분단의 아픔만큼 혈육과 터전을 되찾은 삶은 분단 이전시기와 분단시기에 비해 더욱 보람될 것이다. 산업간의 유기적 관계의 다양화와 고도화, 생산력의 제고와 생산관계의 재조정, 사회적 제가치의 분배와 조직, 각급 문화의 창조와 향유 등의 모든 측면에서 통일된 삶은 양적 풍요와 질적 고양을 구가할 조건을 누린다. 남한의 양적 성장과 문화적 타락과 정신적 피폐, 그리고 북한에서 지녀온 간고역경의 견딜힘과 오염도 낮은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일상적 향유에서의 궁핍이 서로 만나면 피할 수 없는 부조화의 과도기를 거쳐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상승효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지양된 재결합은 세계화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인류의 평화와 협력에 귀감을 제공하며 ‘큰 제국주의를 쫓아가는 작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참된 공동체를 향한 건설에로 나아갈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통일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민족의 실질적 내용은, 적어도 중심적 내용은 노동자·민중이다. 통일이 새롭게 일구는 민족의 삶이나 국가적 진로는 모두 민중의 것이고 민중을 위한 것이며 민중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통일을 향한 진군 또한 당연히 노동자·민중의 주도라는 형식과 과정을 통해서만 힘있고 실질적인 것이 된다.

해방·통일운동 주체로서의 계급, 민중, 민족

통일의 실질적 함축은 민족과 민중의 해방이다. 해방은 원칙적으로 인류의 해방이다. 인간해방은 類의 수준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현태가 된다. 인간의 근원적 본성 또한 類의 수준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시공적 현실의 맥락에서 인간해방과 인간본성은 種의 수준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시대에 있어 해방의 내용이 되고 주체가 되는 종적 인간은 계급이다. 다만, 해방의 두 양태인 변혁과 통일을 아우를 때 민족 또한 종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다. 여기서는 우리시대 유적 인간공동체의 중심주체이자 우리사회 종적공동체의 주도성원인 노동계급에 대한 논급은 생략하고, 민족과 민중이라는 부차적 의미의 종적 인간의 의미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종적 인간공동체는 인류의 외연적 분할에 의한 선행적 영속적 단위가 아니면서, 다른 한편 그 공동체 자체의 선행형태를 포함하는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민족은 역사의 담지체라는 의미를 지니며, 역사적 연관이 있는만큼 현실적 의미의 종적 인간공동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조선을 제외한 고려 이전의 역사에서 민족공동체의 선행형태를 찾기를 거부하는 논리나 관점은 편협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역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민족의 내적 통일성과 외적 독자성은 각 시대

에 따라 지녔던 특수성이나 한계를 먼 채로나마 성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족사에 담긴 고전들은 인접하거나 대립했던 문화들과의 관계 내지 비교를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그 독자성과 독창성을 밝혀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근대의 문턱에서 크게 단절 내지 상해를 당한 역사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대에의 진입 이후 분단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총체성을 고양된 양태로 회복해내기 위해서도 민족공동체의 종적 성격은 존중되어야 하고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만 공동체의 삶을 소외시키는 내적 외적 억압을 깨뜨리는 오늘과 내일의 과업도 정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그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정체도 올바르게 확인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해방된 종적공동체는 계급이라는 형태에서 정당한 의미를 지니며 그 이상의 유적공동체의 환상이나 그 이하의 퇴행적 형태로서의 특수 계층들의 이념은 현실적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다만, 역사의 진행이 근대민족국가 이전으로 역류하거나 인류사의 현실이 국가 단위의 특수성을 무효화할 만큼의 유적 본성을 실현하지 않는 한, 계급없는 공동체를 향한 변혁과 통일의 운동적 道程에 위치한 남북한 성원에게 민족은 현실적·당위적 의미를 지닌 공동체의 한 부차적 또는 계기적 대안 양태가 될 것이다. 요컨대 '민족'은 前계급적 '인민'을 '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통일성으로 매개하는 동시에 민중에 의해 계급으로 매개되어가는, 종적공동체의 한 양태이다.

민족적 과업의 역사적 수행은 다시 시대현실적 요구에 따라 민중이라는 중심주체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요구된다. 시대의 근본모순과 주요모순들의 결합형태는 이제 법제도의 형식이나 종교

(순수관념 또는 이론), 철학적 의식, 관념 등의 추상 영역에서의 미봉적 변화로써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모순적결·갈등해소의 과업은 이제 종적 인간공동체의 균등한 참여 또는 형식적 민주절차를 통한 법적 대표의 의사결정 등의 비현실적 환상이나 僞計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 주체들의 실천적 통합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 민족공동체의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체 성원의 자유롭고 균등한 참여를 통해 계획, 수행,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변증법의 안목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사회의 수준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상식이다. 여기서 시대적 과업의 수행을 담지하는 중심주체의 본격적 등장과 활동이 요청된다. 이러한 중심주체가 바로 민중이다. 민중은 근본모순의 당사자로서의 정태적 계급이라는 사회학적 범주가 아니다. 민중은 근본모순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각성된 의식의 공동주체이고, 그 모순관계에서 노동의 편에 서서 자본과 그 대변권력에 맞서는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결단한 정치적 실천의 공동주체이며, 그 모순을 시시각각 새로운 양태로 변모시키고 궁극적으로 철폐하려는 변혁적 투쟁의 역동적 공동주체이다. 민중은 경제적 사회구성 내지 국가의 범역에서 시대의 모순에 대응하는 성원 전체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의식주체이며, 그 모순의 타파에 직접 투신함으로써 민족 또는 인민의 성원 전체의 참여에 개재된 기술적 난점을 실천적으로 해소해내는 공동주체이다.

통일운동의 목적, 방식, 당면과제

민족통일·국토통일을 향한 운동은 곧 민족과 영

토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실질적 작업이 된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변혁과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중심이다.

통일운동은 보편타당한 내용과 형식을 띠고 확산되면서 자본과 정권과 외세가 펼치는 민중교란·노동억압의 논리를 저항도전략으로 와해시켜내는 방향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상 정권과 금권 또한 변혁과 통일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민족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논리요 정신이기도 하다. 변혁이 계급의 '역전' 아닌 '철폐'를 목적으로 하듯 통일은 의세의 간섭과 침탈을 거부하는 체제의 확립과 아울러 민족성원간의 착취와 억압을 배제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할 뿐, 또 다른 억압관계의 창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세계화의 논리와 미국적 세계평화의 논리가 지닌 범지구대중적 이데올로기효과를 고려할 때 민족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통일운동은 '노동'의 좁은 옷이 아니라 '민족'의 넓은 옷을 입어야 한다. 대내외적 대중정서와 그 판단에 저항의 여지를 주지 않는 방향의 표현양식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변혁과 통일의 논리는 세계화의 허구 논리를 능가하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내용과 형식 양측면에서 갖추어야 한다.

통일운동이 재벌과 정권의 실질의도를 와해시키는 과업은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민족관·통일관·미래관을 민족성원·국민성원에게 널리 확산하고 당위에 맞는 요구를 지배집단에 대해 확대강화함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통일운동은 허구적 세계화의 논리를 직접 격파하는 논리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 예컨대 금권과 정권이 내세우는 의미에서의 세계시장의 개척이나 세계 동료인간들과의 공존·공영은 민족생활권

의 개방·확대나 민족성원간의 화해·공존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 '세계 일등국가'로의 발돋움은 분단 국가의 자격으로는 시도한다는 것조차 회화적이다. 금권권력이 주창하듯 세계를 향해 뿔뿔이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을 제출하며 국제현실을 개선·개혁해 나가는 국가이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내문제를 둘러 싸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불식해야 한다. 국민과 민족에 대해 음모와 암투를 지속하는 금력과 권력이 인류와 세계에 대해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것을 진실인 것으로 믿어줄 동시대 인간群·국가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통일과 통일운동의 원칙적 방향

통일운동이 통일의 당위적 의미와 원천적 의의에 맞는 쪽으로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원초적 발걸음에서 통일 이후 새나라 세우기의 모듬살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원칙과 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거나 않을 경우 통일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갈등과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 세계화의 불가피한 정세를 이용하여 바깥 힘을 끌어들이 안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작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 통일을 향한 계급·민중·민족의 실천은 남과 북, 민과 官, 남녀·노소·빈부·지역·문벌·학벌 등등 모든 차이를 벗어나 계급타파를 중심으로 한 자유·평등·평화의 원리적 가치의 수호 및 절차적 원칙의 준수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현실과 무관한 공상을 배제할 때 통일과 통일운동을 관통하는 원칙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1. 남북의 일방적 이익에 앞선 통일의 우선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 어느 쪽에서든 일방적 승리나 흡수를 위해 추구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한다. 넓은 의미의 통일과 좁은 의미의 통일을 구별함이 여기서는 없어야 한다. 이는 어떤 수준의 것이든 통일을 이루고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화해나 공유 등 작거나 낮은 수준의 통일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희생이나 양보를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한 쪽이 대규모 플랜트의 무상공여 등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통일에 어긋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제3자로부터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남북한 사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어느 쪽이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장전이며 강제조항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양쪽이 모두 상시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상의 원리로서는 여전히 의미있는 규범이 된다. 특히 이 원칙은 명시적으로 논의하기 거북한 중요한 문제를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남북 어느 쪽도 흡수통일의 의도를 원칙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통일 이후의 경제·정치 체계는 현재의 남북한 체제로의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통일은 인류세계에 전례없는 새로운 체제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무력과 폭력을 철저히 거부하고 평화적 방법을 고수한다.

이는 원칙1의 정신에 따르는 당연한 귀결이다. 설령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원점회귀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무력용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 원칙은 내면적 의미연관에 따라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함축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한은 통일 자체를 위해 노력하지는 기본정신에 따라야 하며, 그런만큼 어떤 시점에서든 그때까지 쌓아온 관계의 진전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 즉 확립된 관행이나 제도는 합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진전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퇴행시키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화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의 누적이라는 원칙은 다시 여러 측면의 부수적 원칙을 함축한다. 제3의 가상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병력과 무기의 감축 내지 비무장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거짓선전의 금지, 자신과 상대방에 관한 사실정보의 은폐나 기만의 금지, 인적·물적 교류의 계속적 확대·강화, 모든 시점에서 인적·상황적 능력·조건상 가능한 모든 방법의 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대외적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며 민족간의 자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분단의 정치적 원인이나 도덕적 책임이 민족 내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만큼 민족 바깥 세력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통일의 방식과 내용 및 결과에 간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관계기류 또한 당사자해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이 점은 민족 외부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뚝뚝하게 천명해야 한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을 비롯한 외세는 참고의견 제시 이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의 진전에 간섭하거나 조정하려고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남북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인정하는 한도와 방식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남북한에게 협조를 제공하거나 남북한으로부터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문제해결에 개입하거나 조종할 자격이 없다. 독일을 비롯한 분단국통일의 사례들과 주변 강대국들의 견해나 의지는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참고적 고려 이상의 규정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점들과 무관한 원칙의 수준에, 그리고 이런 점들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남북의 당사국은 특정 외세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통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를 품거나 기도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4. 대내적 민주성을 최대한 실현하며, 통일의 논의와 실천에 참여제한을 두지 않는다.

변혁과 통일의 두 측면을 지닌 우리시대 인간해방 곧 종적공동체의 실현은 계급·민중·민족 성원 모두가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남북의 금력과 권력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해방통일의 당위적·현실적 주체들에게 사상표현과 행위실천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남북의 정부당국은 원칙적으로 이들 주체의 부분적이지만 대표적인 성원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지니면서 동시에 전체성원의 합의된 의사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는 일문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통일추진의 구체적 절차와 단계에 관련해 볼 때 남북의 정권당국이 일정한 범위의 조정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정리와

조정의 권한은 위임된 것일 뿐 고유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언제나 주권자의 합의에 의해 되거나 어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통일추진의 전체과정에서 남북의 권력당국은 민족대중의 일반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남김이나 숨김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정리·보고해야 하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민족의사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정치·문화의 모든 수준에서 남북 민족대중간의 교류와 의사교통 및 합의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합법화하고 실제로 촉진해야 한다.

요컨대 통일추진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철저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향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과정과는 일단 구별되는 남북의 정상적 정치과정이 최대한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북은 각각 권력승계와 정책운용의 모든 측면에서 주권국민의 의사를 수용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각종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각종 법률·제도·관행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폐기·개정·제정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5. 국제사회의 화합과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민족통일·국토통일은 일정지역 혈연공동체의 배타적 안녕·복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 통일된 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풍요와 안보는 대외적 착취나 억압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는 민족의 선험적 고유성·영속성이 무의미함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타국민민에 불이익을 끼치는 도발적·적대적 경제·정치·문화 행태를 스스로 철저히 금지할 것임을 대내외적으

로 천명한다. 아울러 더욱 강대해진 힘과 국제적 발언권에 기반하여 국제간의 불평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세계평화에의 기여라는 원칙은 일차적으로 통일과업의 정당성과 내재적 가치를 민족성원 스스로 확보하고 강화한다는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원칙은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특히 관련 4강과의 관계 및 사상간의 의견차이 내지 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물론 한반도분단의 경우 독일 등의 사례와는 원천적 의미를 달리하는 사건인만큼 그 분단의 해소에 대한 외세들의 개입자격은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체제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패권을 분점하고 있는 외세들이 통일된 고려연방(가칭)이 지닐 잠재력 때문에 우리의 통일추진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개연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평화의 원칙은 대외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강화하는 데 유효하게 기여할 것이다.

국제평화의 원칙에 담긴 현실적 효용의 맥락에서 보면 실상 앞에 열거된 모든 원칙이 그와 조응한다. 국제평화의 원칙은 앞선 네 가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더욱 명분과 현실적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이들 다섯가지 원칙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다른 것의 전제나 바탕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통일의 당위성을 그 자체로 확정하는 데에서,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나 결론적 국면에서 있을 수 있는 대내외적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근거·이유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의 원칙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은퇴로 마감한 서태지들을 보지 못한 채 쓰여졌지만 그들의 은퇴가 그들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하는 이 글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좀 더 거리를 두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확보하게 되자, 이 글의 잠정적 결론에 좀 더 자신을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 던지는 핵심적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하나의 하위문화적 실천과 하위문화적 집단의 형성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댄스 음악, 록, 랩 등의 대중음악의 특정 장르를 특정 의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실천되고 의미화된다고 파악해야 하는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른 그룹들이나 가수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들이 그러한 희대의 성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서태지의 등장은 근본적으로는 포스트모던적 감수성과 우리사회의 특유한 '낙오자' 정서의 만남과 교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정서적 흐름들을 감각적으로 선취하고 그것을 하나의 스타일적 실천으로 형상화하는 탁월한 서태지들의 능력이 그들을 '예술가적' 대중스타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를 자기정체성의 하위집단으로 고정되는 특징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하위문화적 실천과 유사한 특징들-웃, 오브제-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힘보다는 대중 소비문화의 순환체계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은퇴 후 확인되는 듯하다. 결국 서태지 현상은 언젠가부터 조금씩 흘러다니던 흐름이 하나의 물줄기로 이어져 급기야 한 곳에 이르러 요동치는 물결이 되었으며 하나의 정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채 다시 흘러가는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을 중심으로하는)낙오자들의 정서와 그 반사적 욕망의 집합적 에너지였던 것은 아닐까? 운

동권의 그 어떤 노래도 표현하지 못했던 씩씩한 좌절감, 그 어떤 건강한 혁명적 노래로도 위안할 수 없었던 분노.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을 곳은 자기 연민적, 나르시시즘적 대중스타이거나, 아니면 절망감을 표현해 줄 서태지 같은 이들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용기, 투쟁과 의지의 정서는 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환상이다.

1. '태지boys' 현상의 문화적 위치

92년 3월 초라하게 데뷔했던 서태지와 아이들(태지 보이즈)은 95년 10월 4번째 '데뷔'에 이르러 이 시대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음악인으로 자리잡았다. 팬들은 그들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예술가'이며, "그들이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숭앙한다. 이제 팬의 범위는 10대 중고생 여자를 중심으로 한 컬트적인 팬들로부터 20대 남녀와 청년들에게까지 두터워지고 있고 40대 이후 부모들에게도 찬반 어느 쪽이든 그들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다. 3집 앨범의 사탄설 공방이나 4집 앨범의 공운 심의 시비를 계기로 TV잡지나 청소년 잡지는 물론 PC통신, 영화 전문 잡지, 일반 시사잡지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으로써 그들은 김창완의 말대로 "대중음악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반향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단순히 인기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정착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태지보이즈의 음악적 장르인 록과 랩은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록의 경우 그 본원지는 물론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도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랩은 유행음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팬들과 평론가들은 태지보이즈의 음악은 무언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대중음악을 문화현상으로서 인식하게 만든 주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낳는 것인가? 록과 랩이 서구의 대중음악, 대중문화, 특히 청년문화의 맥락에서 이미 문화론적 논의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다. 1950년대 영국의 노동계급에서의 재즈 확산, 50년대 말 백인 노동계급 청년 속에서 록큰롤의 발생 이래 록은 영미를 중심으로 장르 내적 변화를 통해 이미 하위문화적 특성을 이어왔고 70년대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레게, 80년대 미국의 흑인 슬럼가의 랩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음악들은 저항성이나 지배문화에의 포섭이나라는 논의들은 물론 하위문화적인 정체성 형성의 연행이라는 틀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록큰롤은 대중문화를 단지 이데올로기 투쟁의 지배적인 장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화구성체로서 분석되기도 한다. 이 글은 태지보이즈를 하위문화론의 관점과 포스트모던한 감수성의 구조를 분석하는 문화구성체론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이는 록큰롤이나 랩이 단지 서태지의 전유물이거나 그들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태지보이즈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앞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90년대의 70년대 産

: 풍요 속의 패배자들

태지들에 대한 논란은 특히 3집 이후 그들이 교육 현실과 청소년문제를 메시지로 삼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청소년 세대의 문제는 이미 록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60년대 서구 록큰롤에서 비롯된 하위문화들은 가부장적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저항, 교사, 경찰, '존경받을 만한' 청년들로 상징되는 계급 재생산의 사회체제유지의 수호자와 모범생들에 대한 저항이라는 대립항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항은 록큰롤의 특정 형태로 60년대에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가부장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억압이나 계급사회에서 노동자나 룸펜의 형성은 60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음악 장르는 록큰롤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Hebdige는 영국의 경우 전통적인 삶의 유형들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특성의 역사적 조건으로 본다. 노동자계급 공동체의 해체, 전통적 환경의 상실, 매스컴의 등장, 가족구성원의 변화, 학교와 직장의 조직변화, 노동과 여가의 상대적 위상 이동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노동계급공동체를 분화시키고 양극화시켰으며 계급경험을 변화시켰다. 청년문화의 발달은 이런 양극적 분화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계급 청년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고안된 시장이 창출되었으며 교육제도가 변화한 것은 청년들의 세대의식을 조성했다.(Hebdige 1979: 73-4)

그렇다면 태지들 현상과 우리나라 청년세대 혹은 신세대의 밀접한 관련은 어떠한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생각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90년대는 영국의 60년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교육제도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체제로

의 진입으로 잉여 흡수 시장은 문화산업을 팽창시켰다. 우리사회는 노동자계급 공동체의 해체라는 경험 보다는 농촌공동체의 해체로부터 익명적 도시 생활로의 급격한 이동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의 조직원리는 자본주의적 합리화로 인한 경쟁체제의 확립과 강화로 자리잡혔다. 서태지의 주수용층인 70년대산의 세대들은 이러한 조건에 처한 부모세대 속에서 자라났고 곧바로 그러한 체제로 진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사회나 계급재생산의 주요 기제가 교육제도이지만, 서구와 우리사회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그 메커니즘이란 직업기능 교육/인문교육으로 이미 그 계급구분을 짓는 것인데 비해 우리 사회는 계급불평등구조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하는 능력별 평등주의의 지지대로 학력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교육제도는 곧 입시제도를 위한 제도가 된다. 결국 우리사회의 90년대의 청년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살아온 아버지세대들의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해온 핵가족 속에서, 그리고 명령과 복종만이 미덕인 작은 사회체제, 학교 속에서 심화되어가는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를 정당화하는 학력이데올로기를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가와 놀이란 거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그들은 옷이나 소품정도는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모와 학교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곳, 많이 '튀지' 않고, 들키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 대중가요이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의 90년대 누적된 요소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적 현상으로 집약되어 폭발하게 된 역사적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 남아있다. 왜 서태지였는가? 혹은 왜 그들의 랩과 댄스, 랩과 록이 그들의 음악 언어로 수용되어야 했으며, 그들의 스타일에 대한 추종으로 나타나야 했는가? 왜 그러한 형태로 발생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 글 전체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우선은 록과 랩, 랩과 댄스의 결합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포스트모던한 감수성의 변화의 구조부터 살펴보자.

3. 록과 랩

정서적 감수성

현대인들은 대중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이 대중문화는 일련의 문화관행들의 역사적 축적과 조직 속에 위치한다. 그로스버그는 그러한 관행들의 역사적 접합을 문화구성체라고 명명하는데, 록큰롤과 같은 특정 대중문화의 양식을 그것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실제적인 문화구조로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문화구성체는 여러 상이한 효과의 평면들을 가로지르면서 작동하면서 특정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감수성은 구성체 내에 거주하는 특수한 관행과 개인 및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들을 규정해준다. 감수성은 상이한 의미작용의 평면과 표상작용의 평면을 지니고 있다. 현대 대중문화는 욕망(리비도적 감수성), 환상, 쾌락을 포함하는 상이한 조직을 구성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도 직, 간접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언제나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긴장의 완화, 프라이버시, 즐거움, 좋은 느낌, 재미, 열정, 감동의 장소

를 제공한다. 대중문화가 작동하는 곳은 육체와 정서(emotion)의 교차 속에서도이다. 눈물, 웃음, 비명, 눈감기 등 의식적 통제를 넘어선 육감적 반응은 대중문화가 그 효과를 육체에 직접 각인시킴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그것은 감동, 재미, 카니발적인 흥분, 감상적인 느낌 등의 정서와 만난다. 정서는 체험된 것에 색조와 톤과 결을 부여한다. 정서는 느낌 및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느낌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효과의 한 영역이다.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사람마다 상이하게 느껴진다. 결국 상이한 정서적 맥락은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의미와 쾌락을 굴절시킨다. 각 정서 형태는 상이한 감동적 반응이나 몰입을 산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서사의 매개효과를 통해 접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소속감과 동일시의 기제이다. 그리하여 정서적 감수성(affect sensibility)과 더불어 작동하는 대중문화는 서로가 정서적으로 연결된 계기를 설정해준다.(Grossberg 1992:69-87)

대중문화의 음악적 형태나 장르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감수성을 표현하거나 특정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생산, 유통되는 문화구성체 속에서의 맥락에 따라 이미 발생되어 가는 정서적 맥락과 맞아 떨어져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설정해줄 때 특정한 감수성으로 표현되고 특정의 의미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92년 3월 어떤 연예프로그램의 데뷔 무대에서 음악인이나 PD들로부터 평균 75점이라는 저조한 점을 받았음에도 상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신청 순위에서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그들 음악과 춤, 의상, 무대매너의 특징은 랩, 회오리춤, 원색적인 색깔, 혈령한 바지,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요약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혼용일체되어

통일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들의 춤은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한 제스처나 단순한 리듬에 따라 연결되는 기존의 댄스풍의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적 새로움과 통일적으로 조화하여 그 이미지를 통합해내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데뷔 시 <난 알아요>의 무대매너 또한 방송에서는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관행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무대에 등장할 때 아주 '버릇없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대며 '제멋대로' 동작을 취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버릇없음의 반발감이라는 기묘한 느낌을 낳았다. 당시 유행하던 댄스음악은 일차적으로 육체에만 작용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었는데 비해 태지들의 댄스는 랩과 결합되고 파격과 반항의 느낌을 자아내는 제스처를 통해 육체와 정서의 차원을 결합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효과는 몰입을 산출하였다. 돌연한 예기치 못한 상승을 낳은 그들의 힘이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90년대 분출되어야 할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무정형의 정서를 랩과 댄스, 의상, 무대매너 등으로 구성되는 음악적스타일과 이미지로 구현하였다는 데 있다.

포스트모던 감수성

-- 콜라주와 진정한 비진정성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서적 감수성의 90년대식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에 답하기 앞서 우선 서구에서 록과 감수성의 구조의 관계 및 그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감수성의 구조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한 차원이기 때문이다. 록은 50년대 앞서 살펴본 바처럼 2차대전 후 사회전반적인 제조적과 삶의 양식의 변환 무렵

탄생하였다. 록큰롤이라는 단어가 성교 행위를 나타내는 은어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직접적으로 육체에 작용하는 음악적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기타와 스피커라는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기타나 현악기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보다 더 직접적이며 여러 형태의 효과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드럼과 같은 타악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기반한 반복적이면서도 변화가능한 리듬은 당시 청년 노동계급의 정서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공격성, 즉흥성 등의 요소는 여러가지 스타일이 부가되어 일상의 지루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이제 록큰롤은 리듬 앤 브루스나 레게 등과 같은 흑인의 음악적 성과들을 흡수하면서 진정한 이데올로기로서 팝음악에 대한 특권을 주장한다. 그런데 80년대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펑크와 디스코가 결합하여 post-punk나 뉴웨이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팝에 대한 록의 특권이 전복되었다. 이러한 록 음악은 음악시장에 들어가면서, 또한 내부의 여러 형태의 변형(트래쉬 메탈, 글램메탈, 펑크, 아트 락, 얼터너티브락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진정한 록정신을 둘러싼 의미투쟁들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결국 특정의 스타일이 진정성을 가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성은 연행자에게도 점점 단지 또다른 스타일로 여겨진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랩은 진정성의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결국 또다른 정체성의 연행임을 보여준다. 결국 록이 진정성의 미학을 가졌느냐라는 문제 보다는 이미지마케팅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50년대와 그 이후 80년대에 이르러 정서적 감수성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진정성의 이데올로기는 청년문화가 정서와 이데

올로기를 접합함으로써 낙관주의와 냉소주의 간의 모순을 재접합하려는 전략이었다면 80년대에 와서는 진정한 비진정성이라는 진정성 이데올로기의 자기패러디로서, 정서와 이데올로기의 접합의 불가능성을 신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록의 장르와 다른 여러 장르들의 연결(alliance)이 콜라주적인 방식을 통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감수성구조는 포스트모던한 정서에 맥을 닿는 것으로 진정성의 이데올로기 대신 그것의 자기의식적 패러디인 진정한 비진정성(authentic inauthenticity)의 정서구조에 의해 지배된다.(Grossberg 1992: 205-9; 234-9)

90년대 우리사회의 정서적 감수성구조의 한 차원은 이러한 장르간 콜라주적인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집 이후 서태지에 대한 논의의 주축을 이루는 록으로의 회귀나 아니나의 논의는 변화된 정서구조를 포착하지 못한 채 진정성의 이데올로기를 부과하려는 시도이다. '진정한 록정신'으로 표현되는 록에 대한 진정성의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의 소위 언더그라운드 록그룹 및 그 매니아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서태지의 등장 이후 평론가들이나 PC통신을 통해 주장하는 몇몇 이들에 의해 또다른 형태로 담론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록의 대부 신중현은 록을 버리고 댄스로 '영합'하는 서태지를 보고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스스로 밝힌다.(MBC <추적60분> 95. 12. 17. 방영에서) PC통신의 서태지 방에서 몇몇 이들에 따르면 서태지는 한국 록음악의 계보를 잇는 주자이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그의 자아분열이다. "랩이 서태지라면 록은 정현철"(강명석 외, 1995: 353)이다. 그들에 따르면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두 사람이 분열하고 화해할 줄 모르거나 <하여가>에서처럼 화해하고 있다. 그

리고 3집 부터 논평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록으로 회귀하고 있기에 주노와 현철은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태지는 이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3집앨범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록과 댄스의 결합"으로 여겼고 그것의 구현은 음악과 춤의 역할 분담을 통해, 그리고 음악 속에서는 "최대한 춤출 수 있는 비트를 꼬집어 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통해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또한 서태지가 록의 팝에 대한 특권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당신의 음악적 출발점은 이제 전설로만 남아있는 김중서와 신대철 등이 멤버로 있었던 헤비메탈 그룹 '시나위'가 아닌가?...이 그룹이 해산한 후 록 밴드 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댄스그룹으로 180도 전환한 것은 ... 경악스러웠는데, 당신을 스타덤으로 이끈 댄스뮤직은 단지 당신이 다시 록으로 돌아오기 위한 발판에 불과한 것인가?

(대답) 전반적으로 록이티스트가 댄스뮤직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댄스뮤직은 웬지 나약하고 알팍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보인다. 록은 언제나 최고의 음악이며 최고의 음악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는 록밴드를 할 때도 댄스뮤직을, 특히 흑인 음악을 좋아했다. 내가 흑인들의 댄스뮤직을 듣고 있을라치면 같이 음악을 하던 형들이 삼표음악 또 들니?하고 놀리기도 했다.

...

(질문) ... 좋아했던 음악은 어떤 것이었는가?
(대답) ... 음악을 좋아하는 데 나는 까다롭지 않다. 유명하고 노래만 좋으면 전부 다 좋다. 헤비메탈 밴드에서 베이스를 칠 때도 머틀리 크루나 아이언 메이든, 신데렐라 같은 록 밴드 뿐만 아니라 밀리 바닐라나 자넷 잭슨 같은 이들의 음악도 즐겨 들었다. (강현과의 인터뷰 중에서, 『월간 디딤들』, 1994. 10월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서태지의 부인이 단순한 제

스취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그의 록커 시절부터 이미 록의 팝에 대한 특권을 부정하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가 진정한 록 정신을 잇는 주자인지의 여부가 아니다. 서태지는 '진정한 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정확히 말해 그는 메시지를 형상화하는 음악적 언어로 록에 한 발을 분명 기대고 있긴 하지만 록을 진정성의 관점에서 느끼지 않고 있다. 그는 콜라주적인 포스트모던의 감수성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고 이러한 감수성은 록-랩(댄스)의 결합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평론가들이나 록 매니아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그의 이러한 직관적인 콜라주적 감수성은 90년대 정서적 감성구조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랩--구체적 언어와 씬어벨기의 형식

흑인들의 길거리 음악, 랩을 한국에 소개하고 유행시킨 것이 서태와 아이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랩을 댄스타일과 접목하는 실험은 대중적으로 완전한 성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4집의 '정주영 랩'에 이르러서는 랩의 한국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랩이라는 형식이 그 언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정서구조의 한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오갈 데 없는 간헐음의 느낌, 또는 '낙오자의 정서'는 관조적이거나 객관적인 묘사의 어법으로 녹아들지 못한다. 우리나라 가사의 차원을 한 차원 높혔다고 평가받는 015B와 비교해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 특히 씬어벨는 듯한 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015B는 정밀묘사적 구체적인 그려내기를 통해 기존의 추상적인 어법을

뒤집었다. 그러한 묘사는 대상에 대한 거리를 취한 상태에서의 냉소로 표현된다. 이에 비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은 보다 참여적인 서술방식이며 맺혀있는 말을 뿜어내는 듯한 어법과 발음을 구사한다.

결국! 시간이 멈추어 줄 순 없다(요)
무엇을 망설이나 되는 것은 단지 하나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1집 <환상 속의 그대> 중)

"난, 알아요"나 위의 "(요)와 같이 간간이 들어가서 뿜어내는 발음방식은 4집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낸다. 사이프러스 힐에서 빌어왔다는 4집의 <컴 백 홈>의 코믹한 듯한 콧소리는 외부 대상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을 이야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를 상당부분 억제함으로써 소리를 압축시켜 끊어발음(articulate)한다. 이것은 발음자체에 리듬감이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랩하기에 어려운 한국말의 특성을 소화하여 좀더 명확히 들리는 랩으로 구사하게 한다. 동시에 씬어벨는 듯한 효과까지 넣고 있다.

압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경험에서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교실 이데아>를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관조자나 훈계자가 아닌 낙오자 자신의 정서 그자체로 동일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이젠 족해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 넣고 있어
막힌 꼭 막힌 모두가 막힌 날 그리고 덩싹 우릴 먹어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좀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해
좀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신해철의 이야기대로 1/4의 성공자를 위해 3/4의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우리사회의 중고등학교는 서태지의 체험에 바탕한 외침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에 열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학교 이야기예요 진짜로 일곱시 삼십분까지 학교 가야 되거든요..."(권영철 고1), "정말 우리 교실은 째깍해요 분위기가 어두워서 더 그래요 수업시간에 딱 데 못보게 한다고 창문에다 선풍을 해서 밖에도 못보요..."(유혜정 고1)

"그리고 요즘 대중가요는 너무 사랑 타령 일색이에요 그런 노래 들으면 그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해도 사실 실감이 안나요 우리 여자친구 만나려면 어른들 눈치보아야 하는 처지고 아직 그렇게 애절한 사랑을 한 적도 없어요 그건 20-30대 어른들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노래에서는 남녀 중 한 사람이 배신해서 헤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독립하지도 못했고 모든 일이 두렵기도 하고 공부해야 하나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지 배신하고 그런 일은 드물죠 그런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노래들이라 좋아해요(김갑률 고1)" ("우리는 열광한다", 『월간 디딤들』, 1994. 10: 27, 24)

4. 의미 실천으로서의 스타일

이체동형(homology)으로서의 스타일

서구에서 펑크나 히피 스타일과 같은 경우 선택된 오브제들은 하위문화의 집단적인 자체 이미지와 그룹의 구조, 행위들, 관심들과 이체동형적이다. 녀마같이 자른 옷, 부풀린 머리, 침벨기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전달하는 의미있고 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태지와 아이들 또한 데뷔 때부터 옷, 의모를 '상징적 오브제'로 만들었다. 1집 '난 알아요' 때는 컬러풀한 티셔츠와 반바지, 농구화를 들고 나왔고, 2집 '하여가' 때는 레게 파마와 힙합패션을, 3집 '발해를 꿈꾸며'는 모노톤 컬러의 의상과 랩스커트를, 4집 '킴백홈'은 스노보드 룩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각자 한명씩 코디네이터를 두어 의상을 자체 제작하기도 하는 등 철저한 스타일 관리를 한다. 구성원 각각은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서도 캐릭터별 이미지를 유지한다. 서태지는 깔끔하고 소녀같은 이미지로부터 4집에서는 냉소와 오만한 소년의 이미지를 덧붙였고, 이주노는 어둡고 반항아적인 캐릭터로, 양현석은 건강한 육체미를 가진 남성적 캐릭터로 분해진다.

텅빈 기호
: 사회적 코드의 전복과 의미의 부여

그러나 항구적인 의미체로서의 아이콘은 없다. 예를 들어 펑크는 나찌의 기호인 깃을 사용하였다. 펑크에게는 원래의 의미인 파시즘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깃자를 걸치는 이유에 대해 "미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Hebdige 1979: 117) 즉 단지 충격을 주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찌즘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깃자에서 박탈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기호의 공허성을 잘 보여준다. 특정 가치나 의미가 특정 기호나 상징에 차있지 않은

채 단지 사회적 코드의 파괴에 의한 차별화를 통해서만 의미화되는 것이다.

태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기호와 차별화를 통한 의미화의 필연적인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기존 대중음악의 스타일들로부터 '전유'하고 '탈취'하여 브리콜라주함으로써 전복적인 변형을 하는 의미화 실천을 한다. 동시에 그들의 소위 이미지 변신의 성공가능성은 그들이 기존의 코드를 계발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에 달려있다. 1집에서 상표나 가격표 붙은 옷이나 헐렁한 바지, 귀걸이 등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살짝 어긋남으로써 그들의 귀여운 반항아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성공한 이래 그들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브리콜라주하여 새로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들의 스타일을 보면 그 오브제들이 반드시 자유로움, 개성, 반항적 이미지 등의 의미들로 간주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어떤 오브제들로 구성된 기호든지 의미화될 수 있는 식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확산의 사이클 : 연행과 소비

텅빈 기호의 의미화 실천이 하위문화적인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소비를 통해서이다. 펑크의 새로운 스타일의 혁신은 곧바로 하이패션과 주류패션 속으로 흡수되어 그 산업을 풍부히 하는 역할을 했다. 하위문화의 의미를 만드는 독창적인 혁신이 상품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면 그러자마자 곧 그 의미들은 없어진다. 새로운 스타일이 대량생산되고 확산되면 그것들은 코드화되고,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해가능한 것이 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패션은 그 상표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고 청소년 잡지는 이것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소개해준다. 4집의 경우 '스툼', '펠레펠레'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상당한 액수인데, 이들도 물론 잘 팔리지만, 곧이어 그것을 본뜬 보다 싼 가격의 제품들이 상품화될 것이다. 새로운 코드의 형성-상업화-확산의 사이클 메커니즘은 이미 우리 사회에도 자리잡혔다.

5. 이미지 마케팅

총체적 이미지로의 형상화
: 콘서트와 뮤직비디오

태지들은 이체동형(homology) 식의 음악과 스타일의 통일을 더욱 확장시켜 이미지로 통합한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콘서트와 뮤직비디오 작업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콘서트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팬들)을 상징적인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음향효과, 무대 장치, 조명 등을 통해 시각, 청각적 이미지들은 각 개인의 육체에 각인된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드럼과 전자기타의 청각적 효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명과 무대 배경, 대형멀티비전의 화면이라는 가상의 공간과 바로 손에 잡힐 듯한 무대의 공간을 넘나드는 듯이 보이게 만드는 행위들, 그리고 합성들이 함께 어울어져 집합적인 일체감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집합적 일체감은 물론 서태지의 공연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80년대 많은 민중운동의 문화공연도 그러했고 다른 대중음악의 공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서태지의 그것은 매 공연 때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전과는 다른

장치나 효과들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번 그들의 공연은 새로운 실험적 퍼포먼스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실험성과 그것의 연속성은 집합적 일체감의 재생산과 확대를 가져온다. 한번 공연에 기본 사람에게 그 사건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자리잡게 되고 두번, 세번 갈 때마다 그들의 기억은 이제 이미지로 정착된다. 그리하여 태지들에게는 '태지들은 끊임없는 창조자'라는 또하나의 이미지가 부가되고 그것은 '서태지'라는 네임벨류화된다. 즉 그들이 하는 특성의 음악이 좋아서 태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태지가 하는 것이므로 그가 하는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식의 상승, 확대의 메커니즘이 일종의 하위문화적 하위집단들의 정체성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연결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텍스트 분석으로는 확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간접적인 시사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태지는 최근 뮤직 비디오 작업을 앨범에 못지 않은 또 다른 승부처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는 이미 92년 데뷔와 함께 '클럽' 뮤직비디오(한국적 따로 찍어 만든 것)를 유행시켰다. 물론 그전에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워킹 가라오케" 수준이었고 이는 MTV의 영향으로 눈이 높아진 시청자들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제작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난 알아요>에서부터 <너에게><하여가><발해를 꿈꾸며><1996...>까지 직접 연출한 문화방송의 고재형 프로듀서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만들면 성공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계기였다".(CINE21, 1995.10.24: 20) 27) 아직 국내 가수들 27) 이들의 시장성은 이미 출시된 콘서트 실황 비디오에서 입증

에게 뮤직비디오는 방송용 홍보자료 개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특히 <너에게>서부터 방송사에서 제작해주는 비디오가 아니라 자신들의 돈을 들여 만든 자체제작 비디오를 들고 나오며 영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갔다.²⁸⁾ <난 알아요>에서는 빠른 댄스뮤직으로 현란한 화면을, 이후 비디오에서는 효과기를 이용해 독특한 필름질감을 낸다든가 <발해를 꿈꾸며> 같은 상징성이 강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서태지가 뮤직비디오를 단순히 홍보용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또다른 이미지 형상화의 한 매체로서 보고 있음은 제작비의 규모는 물론 작업스타일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메시지와 영상의 일치에 대해 이미 스스로 구상하면서 감독을 결정하고 작업과정에서도 개입한다.²⁹⁾ 특히 3집을 기점으로 그들은 뮤직비디오의 목적을 가사와 음악이 함축하는 의미를 이미로 풀어 단일한 시청각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3집의 <발해를 꿈꾸며>, 4집의 <컴 백 흠>과 <1996년,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를 분석해본다.³⁰⁾

철원 노동당사에서 촬영된 <발해를 꿈꾸며>는 아련하게 탈색된 화면에서 세 젊은이가 꾸는 꿈을 그린다. 희뿌연 흰 비둘기가 푸드득 푸드득 조그만 새소리와 함께 날아간 후 한 소년이 물끄러미 서서 투명한 기타 전주에 이어 불리워지는 "진정 나에겐 단 하나까지 소망하고 있는게 있어/갈라진 땅의 친구들

됐다. 스타맥스를 통해 배급된 1.2집 콘서트는 약 6만장과 4만장이 팔린 것으로, 스타맥스와 결별한 뒤 자체배급을 통해 판매한 3집콘서트는 약 2만 3천장이 팔렸다. 클래식까지 포함한 뮤직비디오 시장이 연간 15-20만장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비할 때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2만장 이상 팔린 공연비디오로는 우일영상에서 출시한 롤라(2만7-8천장), 드림박스의 김건모 비디오(2만장 이상) 정도가 있다.

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그리고 빠른 템포의 탄식은 주노의 음성과 출현이다. "한민족인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인류가 살고 죽고/처절한 그 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소망과 꿈을 표현하는 기타와 가너린 음성은 비디오 상에서는 당사라는 흑백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당사 건물 안에서 혹은 창문에서 바깥을 보며 파랑/빨강/흰색 등의 인물이 선명히 나타나는 데 비해 빠른 템포와 탄식의 지탄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과거의 장면들과 인물이 겹쳐지거나 오버랩된다. 진취적인 젊은이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28) 태지들의 뮤직비디오 제작비는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으며, 감독 또한 일정하지 않다. 대개 코리아 음악방송이나 뮤직네트웍 같은 음악전문채널의 자체제작 클립비디오의 제작비용은 5백만~6백만원 정도라고 하며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같은 경우도 연출료를 제외하고 7백만원 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컴 백 흠>은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감독을 자주 바꾸는 건 "음악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최고의 감독과 일하고 싶은 욕심 때문"(시네21과의 인터뷰에서-CINE21, 1995. 10.24: 24)이라고 밝히고 있다.

29) 서태지는 "감독을 정하기 전에 여러 아이템을 먼저 생각해 보고 감독을 결정할 때도 그 감독이 가장 잘 찍는 스타일에 대해 꼼꼼히 알아" 본다. <컴 백 흠>은 전체적 흐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냈고 <발해를 꿈꾸며>에서 비둘기를 날린다는 전쟁의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감독과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한다.(CINE21 1995. 10. 24: 24)

30) 태지들이 지금까지 만든 뮤직비디오는 <난 알아요>(고재형 연출), <환상 속의 그대>(김용태 연출 미공개), <하여가>(김종진 연출), <너에게>(고재형 연출), <발해를 꿈꾸며>(고재형 연출), <컴 백 흠>(홍중호 연출), <1996년,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고재형 연출)이다. 그들은 이번 4집 앨범의 대부분의 곡들을 클립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내년 방송을 접을 무렵 비디오앨범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젠 함께 하나를 보여 나가요"의 후렴 부분은 당사 입구 바깥의 하늘이 보이는 건물 위에서 전면에 걸린 '칼라의' 커다란 태극기를 배경으로 힘찬 춤과 결합된다.

탈색된 흑백과 아련한 흰색, 흑백과 칼라는 익숙한 선행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평화의 흰색, 과거와 현재 등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흑백의 이미지는 노동당사라는 배경이나 6.25전쟁의 고아나 피난민의 장면들, 철조망에 사용됨으로써 힘겨운 고통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처음 비둘기의 등장에서부터 다른 형태의 비둘기적 은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련한 흰색이다. 인물로는 현석의 깔끔한 흰색 조끼장장의 스타일이 부각된다. 중간 중간 주노의 검정 옷과 빨간 장갑은 도발적인 표정과 함께 전쟁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부각된다. 탈색된 흑백(빨강)/흰색의 대비는 도상적으로는 십자가 무덤-철조망-고아와 피난민의 피곤한 얼굴/비둘기-우드스탁페스티벌에서 사용된 평상의 상징표에 구현된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된 색의 이미지 대비와 비둘기나 국기와 같은 상징물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란 진부한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춤과 음악 속에서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특정 의미로 상투화되어 있는 상징물을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학적 신선함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컴 백 흠>은 간결한 드라마를 빌려 음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년의 방황과 서태지들의 모습을 한 프레임 안에 합성하고, 수미상궁구조와 3인칭 시점을 취해 전지전능한 관찰자 서태지의 기괴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 비디오에서 사용된 이미지 전달 방법은 카메라의 앵글잡기이다. 카메라 위치를 낮게 하여 아래에서 위로, 혹은 높게 하여 위에

서 아래로 심하게 굴절되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은 전반적인 기조이지만 가솔소년의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집을 나올 때나 숲속이나 도시 공터에서 방황할 때, 학교에서 폭력배를 만나 맞는 장면 등에서 이러한 앵글기법은 참을 수 없음과 구석에 몰린 불안감으로 읽혀진다. <1996년...>은 상징적 이미지와 직접적인 지시대상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배급주의로 황폐해진 세상을 암시하는 붉은 허허벌판에 선 검은 사제복의 세사람을 헬기에서 찍은 부감쇼트가 그 시작이다. 검은 사제복의 사람들은 "정복당해버린 지구에서/쓰러져가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발하는 메시야 같아 보이는 이러한 장면들은 이 노래의 묵시록적 이미지를 상징해준다.

이미지 관리전략

태지들의 이미지 관리전략은 잘 알려져있는 바대로이다. 그들은 어떠한 성격의 공적 장소나 출연에서도 반드시 당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복장이나 소품, 화장으로 분하고 등장한다. 2집 이후로는 광고출연을 삼가고 밤무대에도 서지 않는다. KBS가 복장단정 명령지시를 하면 나가지 않는다. 특히 4집 공론심의에 대한 무수정 삭제발표는 그들의 예술가적 진지함과 저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태지들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잠적, 등장예고, 재등장의 방법이다. 잠적기간 동안에 그들은 방송출연은 물론 사진촬영이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의 방법은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직접적으로 방송사의 소모적인 연예인 이용에 저항하여 음악적 준비의 시간과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음악적 수준과 스타일의 혁신

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 메이킹의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기대감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무엇을 만들고 있을 것이며 서태지와 아이들만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태지들은 텅빈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화실천이 이미지마케팅으로 귀결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이것이 '진정한' 저항적 록이 아니라는 식의 논의로 딱지붙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태지들은 대중문화의 한 현상이며, 대중문화가 대중문화인 것은 전위주의나 정치주의로 한정되지 않는 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평면들의 교차점일 때이다. 태지들의 이미지마케팅은 오늘날 대중문화의 실천의 논리의 한 특징이다.

6. 마이클잭슨과 핑크 플로이드

서태지는 "마이클잭슨의 이미지와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성을 결합한 상"이 그의 이상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태지의 재능은 대중의 정서적 감성구조를 포착하여 음악적 실험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이미지메이킹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음악감독적 능력의 결합에서 나온다. 어떤 대중문화의 현상도 그렇지만 태지들 현상을 단지 이러한 서태지라는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태지들의 성공은 우리사회의 90년대의 경제, 문화적 상황에서 특정의 감성구조의 형성을 지시한다. 태지들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만남과 공명은 90년대 우리사회의 청소년문화, 나아가 청년문화의 대중문화적 특징을 상징한다. 그러나 태지들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하위집단의 정체성을 형성

하는 하위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범주화되기에는 너무나 대중적인 것이 아닐까? 어쩌면 대중매체 시대, 이미지영상의 시대적인 하위문화 형태일 지도 모른다. 혹은 하위문화가 불가능한 시대임을 알려주는 것일까?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Grossberg, Lawrence, 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popular conservatism and postmodern culture, routledge.

Hebdige, Dick, 1979.
Subculture-the meaning of style, 1987, routledge.

강영석 외, 1995.
"서태지를 읽으면 문화가 보인다", 한울미디어.

"월간 디딤돌", 1994. 10.

"씨네21", 1995. 10. 24.

라이브콘서트 <93 마지막 축제> 비디오, 스타맥스

KBS "발해를 꿈꾸며", 3집 콘서트
녹화방송 <94 여름 새로운 도전> 1994. 8.

MBC 특집<서태지와 아이들-컴백 특출> 95. 10. 6

MBC <추적60분> 95. 12. 17

『지식인연대』 소식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홍석만씨가 지식인연대 간사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영규(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진행된 정치·경제의 허와 실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한 글들을 모아 에세이 『말갈지 않은 세상에 말갈은 말』을 내셨습니다.

▶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님께서

그동안 쓰신 '문화' 관련 글들을 모아 『문화론의 문제설정』(문화과학사, 1996)이란 이론서를 내셨습니다.

☞ 이 책은 특정한 사회적 실천들이 어떻게 '문화'로 인식되는지, 문화가 왜 혹은 어떻게 문화로 만들어지는지, 문화라는 통념을 구성하는 관념들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의 관계나 혹은 거기에 개재된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지식인 연대 통신방

지식인 연대의 컴퓨터 통신방이 나우누리 「노동연구포럼」에 개설되어 회원 여러분들이 손쉽게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속 방법

- ① 나우누리와 접속(하이텔 망인 01410으로 접속하거나 직접접속망인 592-5001/2)
- ② GO LABOR를 치면 '노동연구포럼' 첫 화면이 나온다.
- ③ 10번 노동단체 방에 들어간다.
☞ 번 '지식인연대'가 나온다.

▶ 9월 2일 오후 5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8월 5일 운영위원회의 '조직 전망에 대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교수)
한면희(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박성인(정세분석실장)
이종희(사무처장)

▶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변경된 주소나 전화, 팩스, 통신 ID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지식인 연대 자료 및 토론회 일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함께하는 「지식인연대(준)」가 되고자 합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은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자발적인 연대적 사회운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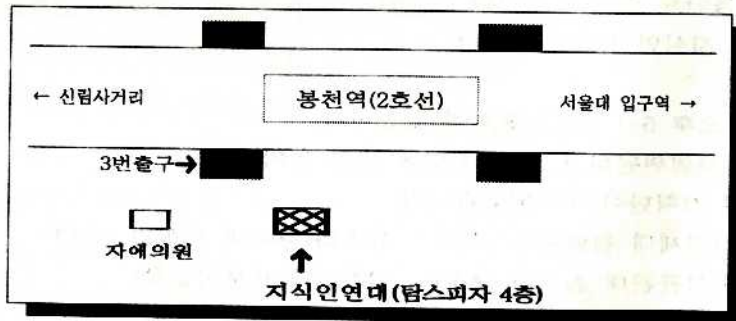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을 지원하고 진보지향적인 시민운동과 연대하며,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은 소토론회, 포럼 등의 프로그램과 조직의 운영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지와 자료집도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은 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월 만원 이상 다음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25-01-0322-136 이명한 지식인연대
한일은행 055-209387-01-101 이명한 지식인연대
우체국 012252-0075839 이명한 지식인연대



<지식인 연대 위치>

Zip : 151-05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930-41 4층
Tel : 879--0871 // Fax : 874-2935 // ID. 참세상 SDP96